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 601일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히어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두드려 부수겠습니다.

사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나라답게
정의롭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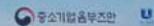
규제혁신포럼

2018.1.2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2018. 9. 17.(월) 14:00





규제는 기업의 제약 조건이자 기업 성장의 지원 동력이다.
나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지만,
좋은 규제는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그 준수과정에서 기업의 제력을 틈틈하게 만든다.
좋은 규제 위에서 인간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될 때 기업경쟁력이 확보된다.

기업은 여러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작은 규모로 인해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그 이행비용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 601일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소기업 음부즈만 박주봉입니다.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독립기관(차관급)으로 지난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음부즈만 또한 기업의 절절한 규제애로를 하나라도 더 풀 수 있도록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풀리는 규제애로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두드림, 음부즈만의 두드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규제개선기관의 두드림, 각 정부부처의 두드림이 모여, 이해관계자간 갈등, 환경·안전·소방·위생 등 사회적 가치와의 충돌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대안이 만들어 집니다.

이 책은 그 노력의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현실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버티기 힘든 규제애로 사항을 알려주고, 음부즈만과 각 부처가 함께 고민하여 그 두드림에 응답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 한명 한명이 절절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고. 이에 기업인이자 음부즈만으로서 다소나마 응답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불합리한 규제애로에 지치지 마시고 계속 두드려주십시오.
중소기업 음부즈만을! 정부부처를! 닫혀진 문은 열립니다.

중소기업 음부즈만

기업 노리로 규제 혁신을

박주봉



1. 레저스포츠산업 성장저해 규제개선

042

01. 진입장벽 완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더 내?	043
산림오토바이는 타지 마라?	044
필요없는 부대조건도 다 맞춰야…	045
종합정비업체와만 계약해라?	046
농어촌형 승마시설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047

02. 기준규제 합리화

거리가 먼 곳은 착륙도 하지 마라?	048
스포츠클라이밍은 운동이 아닌가?	049
서프보드는 되고, 패들보드는 안되고?	050
내수면, 동력보트 유어행위하지 마라	051
10m 안되면 해수욕장 아니다?	052

03. 영업편의 증진

원거리는 일일이 신고해라?	053
수중레저 요금까지 신고해야 하나?	054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요건 완화	국토부
산림에서 동력을 활용한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레저용 트레일러 수리대행 정비업자 요건 현실화	국토부
보트 트레일러 제작자 수리대행 업체 기준 현실화	국토부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대상 확대	농림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소 외에서 이착륙 제한 완화	국토부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에 추가	문체부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완화	해경
내수면에서 동력기관 부착 보트 사용 활성화	해수부
해수욕장의 수심기준 개선	해수부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신고 간소화	해수부
수중레저 이용요금 신고 의무 삭제	해수부



승합차는 왜 승용차보다 검사가 많아?	055
교육받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	056
검사받고 싶어도 힘드네…	057

2. 불합리한 행정조사 및 행정부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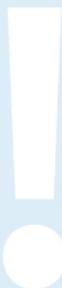
01. 기업핵심 행정조사 일괄정비

화물운송 실적신고 분기마다 해야 하나	059
같은 연구실, 환경부·과기부 각각 조사	060
화학 관련보고서 고용부·환경부 각각 제출	061
생산·수입단가도 보고해야 하나	062
비슷한 보세구역 자료 제출시기 따로	063
보고시기 다르다고 연 2회 의무부과	064
자료제출, 엑셀파일로 내라	065
기간 좀 두고 조사 나오면 안되나	066
오늘 조사나온다고 알려	067

02.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간 단축

다른부처는 60일인데 식약처만 90일	068
단순 신고인데도 처리되려면 10일이나	069
경미한 변경과 최초 신고와 같은 처리기간	070
업종폐업, 시설폐쇄 따로따로	071

중형승합차 자동차 검사부담 완화	국토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험 확대	해수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확대	해경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주기 완화	국토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의 행정조사 부담 완화	환경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고용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 간소화	식약처
특허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자료 제출 시기 일원화	관세청
동일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시기 통합	환경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 온라인 시스템 마련	농림부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확대	고용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사전통지 기한 확대	중기부



간단한 변경은 좀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072
배수변경시 2개 절차를 각각 신청해야	073
농지 증명서, 온라인은 안되나	074
협회에 신고하고, 허가증은 지자체에서 발급	075
통신 · 방문판매 신청은 온라인, 발급은 오프라인	076
법정서류 이외 다른 서류 다시 내라	077
근거는 있어도 시행절차가 없어	078
영업 폐업, 사업자 폐업 통합처리 안되나	079
조달대금 지급신청시 법인은 확인안돼	080
건설기계,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되고	081
자동차는 되고 건설기계는 안되고	082

03.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 경감

업종추가하면 유사교육도 전부 다시	083
안전교육기관 요건이 너무 세, 피해는 기업이.	084
보증금 현물로 하면 안돼	085
철회하고 싶은데 못해	086
휴 · 폐업시 등록 · 허가증 있어야 되나	087
영업신고증 원본 꼭 돌려줘야 하나	088
민원24, 홈텍스 한곳에서만 했다고 과태료	089
피승계인 서명 꼭 필요하나	090
사업마다 비슷한 서류, 번번히	091

기타수질오염원 경미한 변경신고 의제처리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절차 간소화	환경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수령) 허용	농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증 신청(수령) 일원화	국토부
통신 · 방문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우편 · 온라인 수령 허용	공정위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 시 추가서류 제출부담 경감	고용부
공중위생영업 폐업 시 신고 또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절차 마련	복지부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기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식약처
계약대금 신청시 연금 · 건강보험 미가입 증명 간소화	복지부
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절차 간소화	국토부
건설기계 시도내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	국토부



무과실 주류제공에 행정처분	092
지방보조금, 사업별 통장개설해야	093
안전한지, 효과있는지 자료가 너무 많아	094

3.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095

01. 입지 · 환경 등 투자여건 개선

교통에 상관없는데도 영향평가를…	096
천연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되고?	097
장신구 제조시설은 되고 판유리 가공업체는 안되고?	098
동식물 시설설치, 왜 이리 까다로운지?	099
경미한 변경도 일일이 심의를?	100
임대라고 북카페 안돼?	101
오염 증가했는데도 다시 협의를?	102
국가는 되고 기업은 안되고?	103
기술사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되고?	104
작은 공장은 산단 입주하지 말라고?	105
삭제된 법규정으로 점용료를…	106
내지도 않는 농지세 납기일이 기준?	107
점용료 급격히 올려도 조정기준 없어	108
사용할 때 내고 다시 배수할 때 내라?	109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으로?	110

청소년 주류제공시 행정처분 완전경감 규정신설	식약처
지방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개설 완화	행안부
의약외품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식약처



항만건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국토부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용도 명확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자격요건 개선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 완화	국토부
파주출판단지 산업시설구역내 북카페 설치 차별 완화	문체부·산업부
자수지 상류부 공장설립 제한지역 협의절차 간소화	농림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기준 완화	산업부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57개 지자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하천점용료 징수시기 개선	
소하천점용료 조정 기준 마련 또는 완화	
사용한 공업용수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과 폐지	4개 지자체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현실화	국토부



02. 창업 · 기술 등 현실고리 규제개선

전시시설 다 있어야 하나?	111
직업소개소 면적은 6평 이상이어야	112
예전 시설 · 장비기준에 돈만 들어	113
PC방 VR게임해도 높은 칸막이는 안돼	114
이미 충분한 장비가 있는데 또 다시	115
신생 · 소규모 기업은 전문기업 안되나?	116
겸업하려면 칸막이부터 해라	117
음식점, 식품가공업 주방 같이 쓰면 안되나?	118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119
승강기 없는 건축물은덤웨이터 매달검사?	120
연구원 창업 휴직이 왜 이리 짧나?	121
연구원 기업겸직 기간도 최대 3년만?	122
국내 학회는 되고 국제학회는 안되나?	123
협동로봇 동작허가 장치 꼭 있어야 하나?	124
동일라인 · 방식 물티슈라도 신고는 따로	125
소독은 분무방식으로만 해라	126
안전도 평가가 상대평가?	127
신제품은 임의로 가격 산정?	128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차인데 과태료?	129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기준 적용 제외	국토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기준 개선	고용부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요건 현실화	복지부
VR 게임제공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완화	문화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평가기준 합리화	중기부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식약처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식약처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출자비율 완화	교육부
덤웨이터 자체점검 실시기준 완화	행안부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5+1년으로 확대	과기원 등 21개 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의 겸직기간 제한규정 삭제	과기원 등 11개 기관
기술개발지원사업 학회활동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산업용 협동로봇 제작 · 안전기준 현실화	고용부
사람용 · 동물용 물티슈 제조업체 종복규제 완화	농림부
완제품 펫사료 검역 소독방법 합리화	농림부
축산물 도축장 안전관리인증 평가 방식 개선	농림부
치료재료 상한금액 임의산정배수 합리화	복지부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식약처



03. 판로 등 기업 자율성 제고

필요없어도 생산공정 가지고 있어라	130
없어도 되는 민간인증 받아오라	131
적격심사인데 최저가낙찰제로…	132
같은 공장인데 중복 인정 안돼	133
여러 품목 생산하면 따로따로 설비 갖춰라?	134
선박 강선 만드려면 상가선대 있어야…	135
고용인원 증가율 기준 하나?	136
아래도 예외, 저래도 예외…	137
내 책임도 아닌 기간으로 기일초과	138
서류발급 요청했더니 받을 수 없는 서류 요구	139
식용곤충은 사료로 쓰면 안되나	140
기업분할됐다고 산업요원 내보내야	141
청년창업자금 평가내용은 깜깜이	14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너무 적어	143
대행 좀 하고 싶은데 직원 많다고 안돼	144
화학관련 기술인력 고용부담 너무 커	145
건강진단 기준일이 뭐야	146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는 다쳐도 되나	147
지원받으려면 공장임대는 3년은 되야	148
근로자 수가 적음 지원신청도 안돼	149



터치스크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조달품질원
정부조달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인증요건 제외	중기청
지자체 출자기관 전시부스 설치입찰 최저가낙찰제 폐지	(주)엑스코
금속 표시물의 직접생산 확인 제품군 분류 개선	중기부
기계 제품군간 직접생산 확인요건 중복 인정	중기부
강선 직접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보유기준 완화	중기부
MAS 고용우수기업 가점제도 개선	조달청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예외조항 제한	산업부
선박 도면승인 기간을 고려한 납품기간 연장 허용	조달청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완화	환경부
식용곤충의 단미사료 인정범위 확대	농림부
기업분할 신규법인의 병역특례업체 승계 합리화	병무청
청년전용창업자금 용자대상 기업 평가기준 공개	중진공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기재부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가능 사업주 범위 확대	고용부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기술인력 경력기준 완화	환경부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명확화	식약처
소규모 사업주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고용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	중기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	고용부



1. 성장산업 현장밀착 규제혁신

152

01. 관광 · 레저 · 게임산업 성장촉진

- 마리나 대여업, 최소 3년? 153
- 주거 · 공업지역은 문화향유도 안돼? 154
- 사파리공원이 있어야 전문휴양업 가능해 155
- 용도 맞지 않은 지역이 일부라도 무조건 설치불가 156
- 하천변 활용해 레저사업 하고 싶어요 157
- 소방위한 긴급비행도 신속절차가 안돼 158
- 폭발성 적은 소형배터리도 똑같이 159
- 전체 면적만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 160
-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은 어디에 161
- 서핑은 수상체험인지, 일반체험인지? 162
- 기업작다고 등급도 못 정해 163
- 폐업시 다시 신고증 발급해야만 하나 164
- 열기구는 고정형으로만 가능한가? 165
-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르는 휴식년 166
- 이용객수와 상관없이 안전요원은 2명 167
- 여행업 창업하려면 2억원? 168
- 놀이용 드론도 국방, 보안 위험? 169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해수부
-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국토부
- 동물원의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문체부
-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 하천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허용 국토부
- 소방용 드론 항공안전법 적용규제 완화 국토부
- 무인이동체용 소형배터리 선박운송 제한 완화 해수부
-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 산림청 · 환경부
- 수상스키 등 견인 레저기구에 대한 규정 마련 해경
- 연안체험활동 유형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해경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문체부
- 게임제작 · 제공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문체부
- 운항형 열기구 등록 허용 국토부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사전고지 도입 산림청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 문체부
-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문체부
- 저위험 드론(완구 · 레저용) 비행규제 완화 국토부



02. 신산업 · 신기술 활성화

산단 지원시설구역은 태양광 설치 못해	170
신재생에너지 공유지는 되고 국유지는 안 되고	171
농업진흥구역, 새 건물은 태양광 설치못해	172
택지지구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려면 하세월	173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없어 상용화 가로막아	174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하고 싶으나 비용이	175
작지만 불편한 의료기기 외장용기 표시규제	176
유전자치료 하지 말라는 말인가	177
보관은 되도 열람 및 신청은 불편하게	178
인증기관 없이 협동로봇 활성화가 되나	179
첨단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첨단업종 관련법률	180
비영리이나 일일이 동의를	181
파이프는 되고, 연결구는 심사기준 없어 안돼	182
개량제품이 아닌 신제품은 성능인증 불가	183
보다 잘 연구하려는 것을 막아	184
작은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에 긴 세월	185
주변지역은 무조건 5km?	186
첨단기술제품 30% 이상 되어야만	187
벤처촉진지구는 지역거점 안되나	188
너무 넓은 드론 비행금지구역	189
같은 이차전지라도 리튬은 되고 레독스는 안돼	190
건축물이 다 다른데 외벽기준은 하나	191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전면허용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산업부 · 기재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농림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설치	국토부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산업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시 국공유지 사용료 등 완화	산업부
의료기기 용기 · 외장에 대표주소 기재 허용	식약처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 완화	복지부
클라우드보관 진료기록 온라인 열람 · 사본신청 허용	복지부
스마트공장 협동로봇 안전인증 도입	산업부
산업법상 첨단업종에 신기술 · 신산업 반영	산업부
연구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허용	행안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이음관 표준 개정	국표원
신제품 성능인증 별도 심사기준 마련	중기부
연구시설용지에 소규모 생산시설 입주허용	충북경기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준 완화	산업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과기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대상에 포함	산업부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신설	국토부
공급인증서 기증치 적용 전력저장장치(ESS) 범위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증치 부여 건축물 외벽기준 탄력적용	산업부



03. 수요창발산업 규제개선

시뮬레이션 형태는 체육시설 안돼	192
곤충사육은 되고 곤충체험·전시는 안되고	193
같은 기자재, 농사는 되고 식물공장은 안되고	194
삽인샵, 만드는 것이 왜 이리 까다로운지	195
음식점 공간 내 제과점 만드는 것이 왜 안되는지	196
소상공인은 직업소개소 같이 하면 안되나	197
재제조 항목 안에 있는 것만 재제조?	198
외국 지원만 먼저 재활용?	199
폐지는 국산부터 쓰면 안되나	200
재활용 촉진 않는 환경표지	201
중간포장재는 재활용 안해도 되나	202
작은 운동시설은 설치하지 말라는 말인가?	203
해외 수출할려고 하는데 고가 수출실적이 있어야	204
발한실 따로 탈의실 따로	205
가족영화관은 못 만드나?	206
아케이드 게임기기 카드 안되나?	207
곤충은 가축이 아닌가?	208
동물영업자 비슷한 내용 교육 중복받아	209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	문체부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전시시설 입지허용	농림부
식물공장 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 적용	농림부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 정비	복지부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	식약처
소상공인의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규정 완화	고용부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제도 폐지	산업부
국내 재활용지원 우선사용 규정 신설	환경부
국내폐지 우선사용 비율 확대	환경부
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촉진	환경부
중간포장재(마대, 용기 등) EPR 대상 유지	환경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허용	해수부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기재부
체력단련장내 발한실 설치시 탈의실 공동이용 허용	복지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문체부
아케이드 게임기기 결제방식 다양화	문체부
가축 정의에 곤충 포함 명확화	농림부
다수 영업 영위 동물영업자 교육 간소화	농림부



2. 소상공인 부담규제 맞춤개선

210

01. 각종 규제기준 합리화

부숙토 쓰고싶어도 너무 엄격한 기준	211
성분이 좋아도 25°C 안되면 온천 아닌가	212
장례식장서 밥 먹는게 문제?	213
보전산지!, 농어업인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고	214
농촌융복합사업자는 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안되고	215
주택은 사무소 안되나	216
고용창출기업, 산단 입주 힘드네	217
산단에 도시형소공인 집적되도 집적지구는 안돼	218
업종분류에 맞지 않는 첨단업종 기준	219
건폐율 특례가 만기?	220
저수지 상류에도 폐수 무배출 입지 안돼	221
근로자가 많아도 매출이 적은 기업은 어떻게 하나	222
도금업체 구하기 어려운 유자격자 어떻게 고용하나	223
선원없는 선박! 필요없는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224
같은 정부, 다른 기준	225
직접생산 확인함에 공장 면적기준이 웬 말	226
생산시설은 임대하면 안되나	227
인력적어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데…	228
저장탱크는 강철판으로만	229
적격업체 선정할 수 없는 적격업체 평가기준	230



슬러지 부숙토(하수찌꺼기) 활용 확대

환경부

온천수 기준 합리화

행안부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복지부

민북지역 보전산지 임업인 시설설치 허용

산림청

생산관리지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설치 허용

해수부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기준 완화

식약처

산업단지 입주시 고용창출기업 우선순위 부여

국토부·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 포함

중기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 명확화

산업부

녹지·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 기간연장

국토부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 합리화

농림부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 면제기준 합리화

행안부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금업체 기술인력 기준 완화

환경부

20톤 이상 선박의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완화

복지부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

산업부·환경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공장 면적기준 완화

중기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시설 임대보유 확대

중기부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력기준 완화

중기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기준 합리화

환경부

건설폐기물을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

환경부



실내건축, 2억원 있어야 공사가능?	231
특수기술직종, 기술연수 기간이 너무 짧아	232
너무 높은 온천 전문인력 기준	233
창업보육이 지역현실 반영못해	234
기술진단은 오직 공단만	235
천일염 하고 싶은데 입주안돼	236

02. 기업친화적 규제개선

같은 모양·규격으로 창의적 옥외광고 가능하나	237
도시미관·안전을 이유로 한 현실에 맞지 않는 광고규제	238
출자금, 조합원수가 부족하면 지원신청도 불가	239
더 먼 지역은 되고 가까운 지역은 안되고	240
이격거리 기준점은 어디에	241
특수조명기구! 손님이 원해도 불가	242
방사선발생장치 이동·보관시에도 허가까지	243
1인 음식점, 산재보험 가입원해도 안 받아줘	244
시설설치 전에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	245
인정못받는 단체, 협상력 저하	246
종업원 많으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못하나	247
전세버스사업자 주차장 복귀하느라 길에서 시간만	248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도 힘들어	249
취득세 중과제외 신고기한이 너무 짧아	250
경영어려워 휴업, 최대 1년만	25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완화	국토부
특수기술 분야의 기술연수생(D-3) 연수기간 연장	법무부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기준 완화	행안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및 교육 지자체 이양	중기부
약취배출시설 기술진단업 민간개방	환경부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내 천일염 염전 입주허용	산업부



강사 생년월일이 중요하나	252
비농업인이 농업해도 지원 못받아	253
귀농 농촌창업은 세제혜택 없어	254
창업기업은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말인가?	255
작은 기업은 여성인턴 못 쓰나?	256
응급환자 없는데 구급차 보유해라?	257
판매사업자는 3톤 미만에만 영업해라?	258
필요없는 유량계도 2개씩 구비해라	259
전통주 끓음 홍보 및 판매하고 싶은데	260
수입맥주보다 높은 국산주세	261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력 인센티브는 어디에	262
비닐하우스양식 우렁이는 안돼	263
공동이용 혜택 보려면 5인 이상?	264

03. 비용경감 및 시간단축

위생교육 1번, 창업자는 잘 몰라	265
현실성, 필요성이 떨어지는 노래방 교육	266
외국인어업, 허가는 되고 신고는 안되고	267
식품영업자 불편을 야기하는 위임장 서식	268
의료기관은 되고, 약국은 안되고	269
열람은 되고 복사는 안되고	270
변경신고 기한 도과했다고 허가취소	271
수수료 감면기간이 너무 짧아	272

학원강사 연령 및 생년월일 게시의무 폐지	교육부
귀농인 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세제지원	행안부·농림부
창업기업에 대한 E-7비자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법무부
새일여성인턴사업 연계대상 기업 확대	여가부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건 합리화	복지부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산업부
소규모 주류제조자 유량계 구비의무 삭제	국세청
타사 전통주를 자사 전통주와 온라인 병행판매 허용	국세청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주세 부과기준 차별 시정	국세청
고용창출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우대	병무청
개발행위허가 대상 비닐하우스 양식장 범위 명확화	국토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완화를 위한 공동이용 인원기준 축소	국토부

다수 미용업종 시 주업종 위생교육(1개) 명문화	복지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	문체부
외국인 맨손어업 신고 허용	해수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위임장 서식 마련	식약처
약국 양도·양수에 의한 개설자 지위승계 규정 신설	복지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국토부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기간 확대 및 미신고 제재 완화	산림청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	중기부



바로 되는 일이 7일이나 걸려	273
일반산단은 3년, 국가산단은 5년	274
국산화 개발해도 승인까지 한참 기다려	275
작은 기업도 큰 기업도 과징금은 동일하게	276
응급상황 정비해도 행정처분 예외는 없어	277
상속승계 신고기한이 너무 짧아	278
돈부터 먼저 내고 감면은 나중에?	279
매출 작은데, 인원 많다고 과태료도 많이?	280
즉시처리되나 수수료는 내라	281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따로	282
휴·폐업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	283
공영주기장 지원근거가 없어	284

3. 숨어있는 규제애로 적극해소

285

01. 시험·검사기관 규제애로 선진화

시험·검사 처리기한 없어	286
이유도 모르는데 불합격	287
시험·검사기관 깜깜이 수수료	288
내 단계는 지금 어디에	289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야 하지 않나	290
아직도 문턱 높은 시험·검사기관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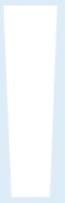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건의	환경부
국가산업단지 지정 해제기간 단축	국토부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기간 단축	국방부
배출시설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적 개선	환경부
자동차 정비업자의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국토부
어업허가 상속시 지위승계 신고기간 합리화	해수부
일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금 반환절차 개선	환경부
진폐예방법 위반 과태료 감경기준 합리화	고용부
건설기계사업 휴·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국토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간소화	식약처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	행안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토부



02. 현실고리 규제애로 적극해소

농지 내 식물공장은 가동하면 안되나	292
따로따로 기자재, 호환어려워	293
청소년은 볼룸댄스 배우면 안되나?	294
해양플랜트도 고숙력 외국인력 필요해	295
의료폐기물은 재활용 안되나	296
신산업분류! 기업은 알기 어려워	297
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영업 안되나	298
전북은 좀 크다고 자해보험도 안돼…	299
개별사업자 협약내용 몰라…	300
로열티 도입되었으나 세부방식이나 평가 없어…	301
4층 이상에는 간판 설치하지 말라	302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공장(수직형 농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부
식물공장 기자재 표준화	농림부
댄스·스포츠의 학원등록 허용	교육부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 비자 허용분야 확대	법무부
의료폐기물 등 병의원 폐기물 관리체계 합리화	환경부·교육부
신산업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안내지원	통계청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	식약처
전북양식수산물 종묘 재해보험 상품 출시	해수부
가맹사업 상생협약서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포	공정위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로열티) 산정방식 구체화	공정위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	행안부

03. 지원사업 및 지자체 규제기준 합리화

내 책임도 아닌데 사업비 환수?	303
뿌리산업 지원금액 및 비중이 너무 적어	304
폐업이력 있다고 정책자금 신청불가	305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도 못 받아	306
100마력 이하 선외기만 지원가능	307
특수선박 건조해야만 수산과학조사선 만들 수 있나?	308
항만시설 매년 새로 갱신…	309
인천 드론 시험비행 공간 없어	31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합리화	중기부
산업단지 내 도급업종 국비지원 사업 확대	산업부
소매업 폐업 이력자도 재창업자금 신청 허용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 추가	중기부
소형어선 어업인에 대한 유류절감장비 지원 확대	해수부
수산과학조사선(시험조사선) 입찰참가 자격요건 완화	해수부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경북도
인천 드론 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	인천시



신청취소해도 돈은 내리?	311
시장, 광장,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안돼	312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는데 증축 가로막아	313
급수공사 수수료는 우리지역만 10만원?	314
장외영향평가서 너무 어려워	315
너무 부족한 자금지원 이차보전율	316

04. 불편시스템 신속개선

연구개발사업 책임은 다른 이에게	317
실적이 없는데도 무신고 과태료?	318
3자 협약은 무조건 대면으로	319
소독업무는 무조건 집합교육만	320
사회적기업 서류제출 창구가 너무 많아	321
폐업하려면 관청 방문해라	322
석유판매사업 찾은 보고, 전산은 안돼	323
학원강사 증명서류는 오프라인으로만	324
유원시설 안전교육은 온라인 안돼	325
공제부금 자동이체만이 방법인가?	326
위생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327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개	328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간의 활동	34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반환	전남도
부산시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확대	부산시
인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계양구
금산군 급수공사 대행수수료 기준 완화	금산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환경부
함양군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함양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사업비 관리 · 정산 합리화	중기부
폐기물 배출 무실적 신고필요 사전안내	환경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자협약 시스템 도입	중기부
소독업무 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시	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고용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온라인 신청	행안부
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사업자 수급보고 간소화	산업부
온라인 학원민원서비스 기능 보완	교육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	문체부
내일채움공제 부금 납입방식 확대	중기부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해수부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 601일

2017년
5~12월

1.

레저스포츠산업 성장저해 규제개선

01. 진입장벽 완화
02. 기준규제 합리화
03. 영업편의 증진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더 내?

현황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1.5배 많은 최소 4천5백만원의 자본금이 필요



!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 자본금요건 완화

개선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인 3천만원으로 완화

• 국토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18.상)

? 산악오토바이는 타지 마라?

현황 산악오토바이, 4륜바이크 등 엔진이나 모터 등이 달린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산림에서 허용하지 않아 산림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 산림에서 동력을 활용한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개선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산림레포츠 시설의 산림 내 설치 허용

- 산림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하)

? 필요없는 부대조건도 다 맞춰야...

현황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을 위해서는 무상수리 대행업자자격을 갖춰야 하나, 가스용기 정비 불가 등 별도조건이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불인정



! 레저용 트레일러 수리대행 정비업자 요건 현실화

개선 레저용 트레일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별도조건일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작자등록 여부결정

- 국토부 :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록 매뉴얼에 반영('18.상)

? 종합정비업체와만 계약해라?

현황 트레일러 규모 상관없이 자동차종합정비업체와 무상수리 대행계약을 필히 체결해야함에 따라, 소형보트 제작자는 대행업자 확보에 애로



! 보트 트레일러 제작자 수리대행업체 기준 현실화

개선 제작자 등록 기준을 자동차 규모별 세분화 및 제작자별 사후 관리 능력을 확보한 정비업자 계약 시 등록 요건으로 인정

- 국토부 :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매뉴얼에 반영('18.상)

? 농어촌형 승마시설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현황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은 설치 가능한 농지가 별로 없음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대상 확대

개선 농업진흥구역 정비를 통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대상 확대

- 농림부 : 농업진흥구역 정비('18.상)

? 거리가 먼 곳은 이착륙도 하지 마라?

현황 이착륙 예정지 주변 30km 이내의 이착륙장 관리자가 이착륙장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착륙 불가

* 이착륙장소 반경 30km 이내에 허가된 이착륙장이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장외 이착륙 금지



!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소 외에서 이착륙 제한 완화

개선 반경 30km 이내에 이착륙장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장외 이착륙 허용하도록 개선

- 국토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18.하)

? 스포츠클라이밍은 운동이 아닌가?

현황 2020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이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 제약



!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에 추가

개선 스포츠클라이밍을 체육시설에 추가

- 문체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8.하)

? 서프보드는 되고, 패들보드는 안되고?

현황 해안선 10km 이내*에서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을 하는 경우,
서프보드 · 원드서핑 외의 레저기구는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필요

* 해안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대여업 영위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면제



!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완화

개선 패들보드 등 유사한 수상레저기구 대여업도 서프보드 등과
동일하게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요건 면제

• 해경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상)

? 내수면, 동력보트 유어행위 하지 마라

현황 지자체장이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낚시) 허용에 소극적임에
따라 어촌 체험, 관광 등과 접목된 내수면에서의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애로



! 내수면에서 동력기관 부착 보트 사용 활성화

개선 지역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하도록 권고

• 해수부 : 지자체 권고('17.하)

? 10m 안되면 해수욕장 아니다?

현황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만 해수욕장 지정 가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애로

? 원거리는 일일이 신고해라?

현황 원거리*지역은 수중레저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자가 선호하나 정기적인 레저활동에도 매번 신고 필요

* 해안선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

! 해수욕장의 수심기준 개선

개선 해수욕장 지정요건 중 수심(1.5m이하)의 '길이(10m) 확보 조건' 폐지(단,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규정 유지)

- 해수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하)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신고 간소화

개선 신고 간소화를 위해 정기적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신고 제도 마련

- 해수부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하)

? 수중레저 요금까지 신고해야 하나?

현황 수중레저사업자는 공중위생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는 없는
탑승료 · 대여료 등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 의무 부담

* 숙박업, 목욕업 등 타 사업은 이용요금 게시의무만 규정



! 수중레저 이용요금 신고 의무 삭제

개선 수중레저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의무 삭제

- 해수부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하)

? 승합차는 왜 승용차보다 검사가 많아?

현황 승용차는 차령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고,
반면 중형승합차는 차령 5년 이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해서 중형승합차 사용자의 부담 가중



! 중형승합차 자동차 검사부담 완화

개선 중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유효기간 적용 차령을 5년 기준
에서 8년으로 완화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상)

? 교육받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

현황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시 교육을 이수하면 승무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으나, 어민들은 타지역에서 장기간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기가 현실상 어려움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험 확대

개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출장 교육·시험 실시 확대

• 해수부 : 출장 교육·시험 실시 확대('17.하)

? 검사받고 싶어도 힘드네...

현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활용 사업장은 증가하나, 검사 대행기관 수가 적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확대

개선 대행기관의 분사무소(지부) 확대 추진

• 해경 : 한국수상레저안전 협회 등 4개 분소 확대('17.하)

2.

불합리한 행정조사 및 행정부담 정비

01. 기업핵심 행정조사 일괄정비
02.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간 단축
03.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 경감

? 화물운송 실적신고 분기마다 해야 하나

현황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 실적을 분기마다 전산입력 해야하는데, 영세·고령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주기 완화

개선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을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 국토부 :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지침 개정('18.3월)

? 같은 연구실, 환경부·과기부 각각 조사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검사대상이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따른 과기부 검사대상으로 중복 조사에 대한 부담 기증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의 행정조사 부담 완화

개선 과기부 점검대상 연구실을 환경부 검사대상에서 제외
(단, 기업 등의 Pilot Plant 연구실은 유지)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18.6월)

? 화학 관련보고서 고용부·환경부 각각 제출

현황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는 고용부에,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 각각 따로 제출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개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조사하여 환경부에만 등록하고 고용부는 환경부 자료를 공유받아 활용

- 고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 생산·수입단가도 보고해야 하나

현황 의료기기업체는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실적 보고, 하지만 연관이 없는 생산·수입 단가 보고도 요구해 간소화 필요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 간소화

개선 의료기기업체 보고 사항에서 '생산·수입단가' 항목 삭제

- 식약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 비슷한 보세구역 자료, 제출시기 따로

현황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은 1월, 자율관리보세구역은 4월로 운영자료를 각각 내야 해 일원화 필요



! 특허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자료 제출 시기 일원화

개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 제출 시기 일원화

- 관세청 : 자율관리보세 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8.3월)

? 보고시기 다르다고 연 2회 의무부과

현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보고를 시설 종류 별로 상 · 하반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 부담 가중

* (상반기)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하반기)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 동일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시기 통합

개선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

- 환경부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 자료제출, 엑셀파일로 내라

현황 도매시장 개설자는 각종 통계자료를 엑셀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해 시간 소모가 많아 불편 발생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 온라인 시스템 마련

개선 온라인으로 자료 입력 ·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도매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농림부 : 도매시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6월)

? 기간 좀 두고 조사 나오면 안되나

현황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시 조사일을 1~2일 전에 통지해 조사 대응에 애로



!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확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산재보험의료기관에게 서면통지

- 고용부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18.3월)

? 오늘 조사나온다고 알려

현황 중기부장관, 지자체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일을 당일에 통지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조사대응애로



!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사전통지 기한 확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 실시

- 중기부 : 조사계획 · 운영 개선('18.3월)

? 다른부처는 60일인데 식약처만 90일

현황 의약품,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 시험 분야 변경시 처리기한이 90일로 과도하여 영업불편 초래 및 매출증대에 악영향

* 더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화학물질), 농진청(농약)의 경우 처리 기간이 60일로 규정



!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처리기간 단축

개선 식약처 소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분야 변경지정 처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 식약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8년)

? 단순 신고인데도 처리되려면 10일이나

현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 설비 · 제품*소유자 신고는 단순 신고임에도 처리기간이 10일이나 소모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전력장비 등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처리기간 단축

개선 신고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 환경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3월)

? 경미한 변경과 최초 신고와 같은 처리기간

현황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경미한 사항도 최초 처리기한과 동일하게 같이 7일이 소요되어 공사 작업 지연 등 애로 발생

! 석면 해체·제거 경미한 변경 처리기한 단축

개선 현장 책임자 또는 작업 근로자의 변경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체 없이 처리하도록 기한 단축
• 고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7.하)

? 업종폐업, 시설폐쇄 따로따로

현황 가축사육업 폐업 시 가축분뇨배출시설도 당연 폐쇄되나, 폐업 신고와 별도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신고를 해야하는 행정불편 초래

*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는 농식품부,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신고는 환경부 소관



! 가축사육업 폐업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신고 의제 처리

개선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신고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농림부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8.하)

? 간단한 변경은 좀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현황 기타 수질오염원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 신고를 이행하나, 대표자·상호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도 대표자 및 상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도 신고해야 해 불편



! 기타수질오염원 경미한 변경신고 의제처리

개선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의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18.6월)

? 배수변경시 2개 절차를 각각 신청해야

현황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배수설비 신청을 하는데, 이때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는 별도로 또 해야 해서 번거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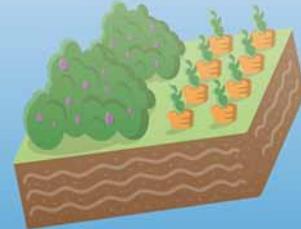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절차 간소화

개선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 번에 하도록 개정

- 환경부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은 안되나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필요한 시간 부담 및 불편 초래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수령) 허용

개선 방문 외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수령 허용

- 농림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대한 고시 개정, 정부24 시스템 구축 및 교육 매뉴얼 작성 · 배포('18.3월)

? 협회에 신고하고, 허가증은 지자체에서 발급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호 · 대표자 · 주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는 협회에 하고, 변경허가증은 지자체에서 발급해 혼란 · 불편야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증 신청(수령) 일원화

개선 변경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변경허가증 신청 · 수령 가능토록 개선

- 국토부 : 지자체 업무처리 공문 시달 및 정부24 시스템 등재('17.12월)

? 통신·방문판매 신청은 온라인, 빨금은 오프라인

현황 통신·방문판매업 신고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나, 신고증은 관할관청 방문수령만을 허용하고 있어 민원행정 편의성 효과 적음



!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우편·온라인 수령 허용

개선 실질적인 민원행정 편의성 증진을 위해 방문 외 온라인·우편으로 신고증 수령 허용

• 공정위 : 정부24 시스템 등재 ('18.12월)

? 법정서류 이외 다른 서류 다시 내라

현황 건축공사의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정 제출서류 외에 건축계획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주 불편 가중



!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시 추가서류 제출부담 경감

개선 추가서류 대신에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우선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업무 매뉴얼 마련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조사업무 매뉴얼 제작('18.3월)

? 근거는 있어도 시행절차가 없어

현황 공중위생업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시행절차가 없어
행정절차 지연 및 업계 애로



! **공중위생영업 폐업 시 신고 또는 등록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

개선 **공중위생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를 위한 시행절차 마련**

-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상)

? 영업 폐업, 사업자 폐업 통합처리 안되나

현황 화장품의 제조 및 제조판매업 폐업신고 시 영업 및
사업자 폐업신고의 통합처리가 안되어 민원 불편 애기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지방식약청에 2개 서류 통합제출 가능



!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기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개선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간소화**

- 식약처 :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18.상)

? 조달대금 지급신청시 법인은 확인안돼

현황 연금·건강보험 미가입 법인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공공조달 계약대금 지급신청시 보험 미가입 조회가 안되서
계약금 수령 지연 등 불편야기
* 발주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문을 통해 미가입사실을 확인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계약대금 신청시 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증명 간소화

개선 발주기관에서 계약대금 지급신청자의 동의하에 보험 가입
상태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
- 복지부 : 시스템 연계('17.11월)

? 건설기계,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되고

현황 사용본거지가 다른 다수 건설기계 소유 법인은 개인소유
건설기계와 달리 주소변경시 온라인 처리 불가
* 개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는 개인의 주소변경시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주소변경에 의해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 중



! 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절차 간소화

개선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기업지원플러스)을 통해 시도내 주소변경 허용

- 자가용 건설기계 시도내 주소변경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 및 기업지원
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 국토부 : 기업지원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 시스템 연계('17.12월)

? 자동차는 되고 건설기계는 안되고

현황 건설기계 관련정보도 자동차와 같이 전산을 통해 관리해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이 불필요함에도 요구하여 번거로움

* 자동차는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폐지('10.6월)



! 건설기계 시도내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

개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도내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

• 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7.6월)

? 업종추가하면 유사교육도 전부 다시

현황 기존 미용업자가 1개 이상의 미용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술교육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 모두 재이수



! 업종을 추가하는 미용업자의 교육부담 완화

개선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을 추가할
경우 기술교육 1시간만 이수하도록 개정

•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개정('18.2월)

안전교육기관 요건이 너무 세, 피해는 기업이.

현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요는 많으나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만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요 공급 미스매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교육기관 요건 완화

개선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 개정

- ① 교육기관의 교육실적뿐 아니라 내부 전문가의 강의실적 추가
 - ② 장비요건 불필요한 목록 삭제 및 일부 품목 수량 축소로 장비요건 완화
- 화학물질안전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하)

빈용기 보증금 현물로 하면 안돼

현황 빈용기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전액 돌려주어야 해서 빈용기 회수율 저조



빈용기 보증금 지급방법 다각화를 통한 불편 해소

개선 빈용기 보증금을 현물로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유권해석('17.12월)

? 철회하고 싶은데 못해

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사업자 지정 철회 신청을 못해 없어,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규정이 없어 취소를 못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철회 규정 신설

개선 사업자의 자발적 지정 철회 신청 규정 신설

- 농림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12월)

? 휴·폐업시 등록·허가증 있어야 되나

현황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 시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하여도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무조건 재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 등 신고 간소화

개선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시 분실·훼손으로 등록증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 대신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 복지부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 영업신고증 원본 꼭 돌려줘야 하나

현황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폐업 신고서와 함께 영업신고증(원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 기업불편 초래

Online
Shopping



Checkout

Add to cart

Phone or email:

Password:

! 통신판매업 폐업시 영업신고증 반납의무 면제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분실 또는 훼손시 분실 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 가능하도록 개선

- 공정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12월)

? 민원24, 홈텍스 한곳에서만 했다고 과태료

현황 온라인 폐업신고시 민원24(인·허가), 홈텍스(사업자등록)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한곳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미신고 과태료 부담



! 온라인 폐업신고 시 안내팝업 등을 통한 민원24·홈텍스 신고 유도

개선 민원24 및 홈텍스에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팝업 or 링크연결을 통해 신고안내 유도

- 행안부 : 홈페이지 개편 시 팝업 시스템 반영('18.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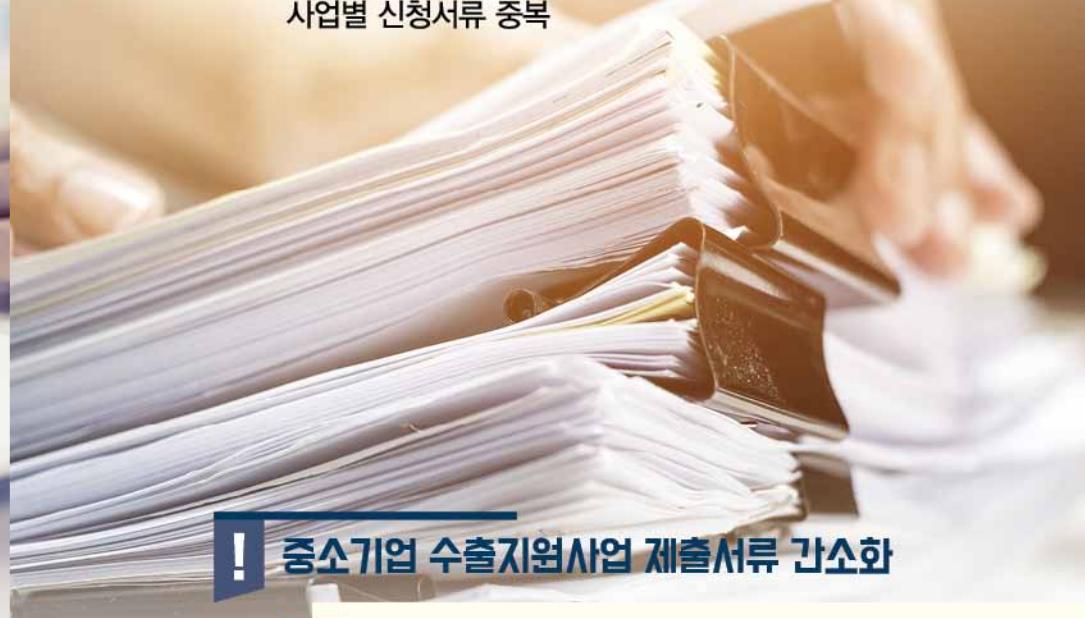
? 피승계인 서명 꼭 필요하나

현황 도로점용 허가권자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작성서류에 피승계인의 서명을 요구해 양도인과의 분쟁 초래



? 사업마다 비슷한 서류, 번번히

현황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산업부, 중기부, 중진공, 코트라 등에서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사업별 신청서류 중복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서류 완화

개선 일선기관 및 피승계인의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피승계인 서명을 제외하도록 서식 간소화

- 국토부 :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17.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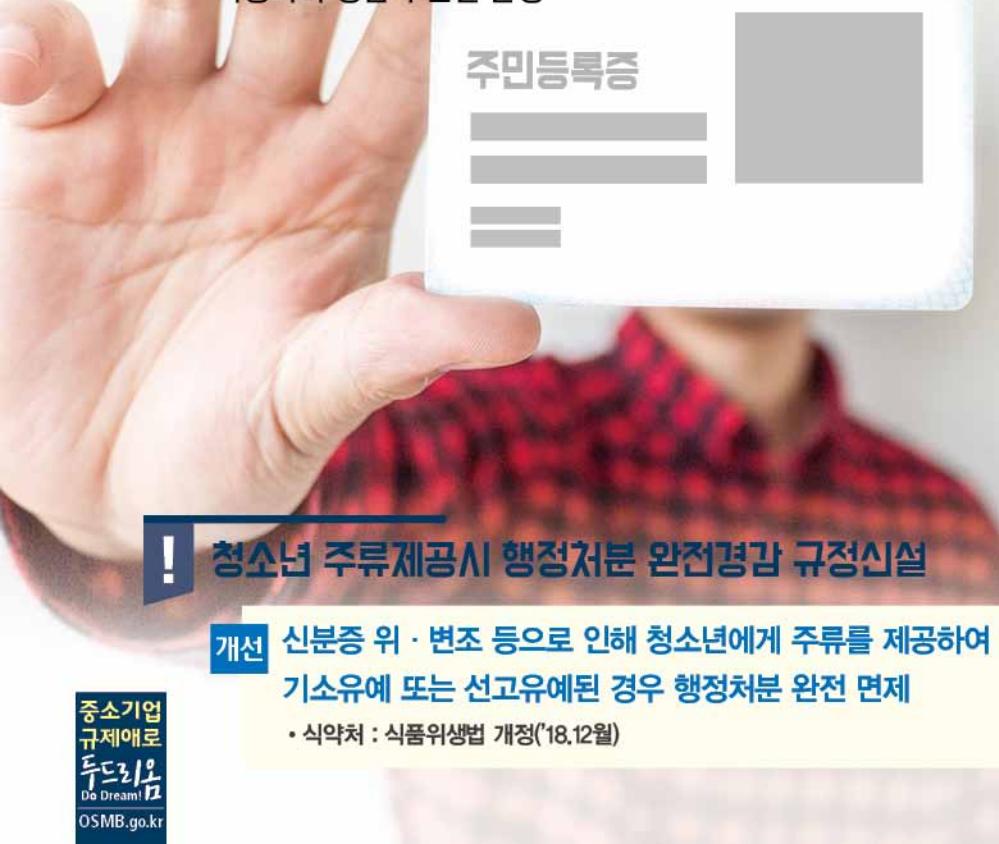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 업체 정보 공유 및 서류 청구 축소, 중진공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중기부 : 수출바우처사업 추진('17.1월), 전자서명 방식 도입('17.9월), 중진공 차세대 시스템 구축('17.11월)

? 무과실 주류제공에 행정처분

현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식품점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행정처분 경감만 가능하여 영업자 손실 발생



! 청소년 주류제공시 행정처분 완전경감 규정신설

개선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된 경우 행정처분 완전 면제
• 식약처 : 식품위생법 개정('18.12월)

? 지방보조금, 사업별 통장개설해야

현황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 지방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개설 완화

개선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통장 활용을 허용
• 행안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17.9월)

? 안전한지, 효과있는지 자료가 너무 많아

현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시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에 따라 안전성 · 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나,
제출 범위가 너무 비합리적



! 의약외품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개선 의약외품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면제 범위 확대

- 식약처 : 의약외품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고시) 개정('17.12월)

3.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01. 입지·환경 등 투자여건 개선
02. 창업·기술 등 현실고리 규제개선
03. 판로 등 기업 자율성 제고

? 교통에 상관없는데도 영향평가를...

현황 항만 건설시 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로 화물을 반출하여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의무화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최소 7~8천만원 (평균 1억~1.5억원)



! 항만건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개선 화물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국토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17.12월)

? 천연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되고?

현황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시설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 가능하나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은 불가

* 버스 차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전기버스 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공급시설 가능 규정 개정

•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8.2월)

? 장신구 제조시설은 되고 판유리 가공업체는 안되고?

현황 판유리가공업 건축물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나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비공해 시설을 공장으로 유권 해석해 입지 제한

* 해당 시설과 유사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미만인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 분류.

!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건축물 용도 명확화

개선 판유리가공업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나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조시설의 경우 균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개정('18.12월)

? 동시물 시설설치, 왜 이리 막다로운지?

현황 법령의 근거·위임 없이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 설치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해당시설의 입지를 제한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3년), 농축산업 종사기간(2~3년), 농지 확보 면적 등의 요건 추가



!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자격요건 개선

개선 개발제한구역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제한 등을 강화한 해당 시·군·구 조례 등을 개선

-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 관련 시설 조례 정비 요청('17.8월)

? 경미한 변경도 '일본이 심의'를?

현황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을 모두 거쳐야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 완화

개선 심의과정 없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하도록
개선

- 국토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18.하)

? '임대라고 북카페 안돼?

현황 파주출판단지 산업시설구역내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출판업을 하는 경우, 북카페 설치 불가

* 자기소유 건축물에서 출판업을 하는 경우에만 북카페 설치 가능



! 파주출판단지 산업시설구역내 북카페 설치 차별 완화

개선 건물을 임차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도 북카페 설치를 허용하여
진입차별 해소

- 문체부, 산업부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8.하)

? 오염 증가인했는데도 다시 협의률?

현황 저수지 상류부 공장설립 제한지역 기존공장은 공장 증축 · 개축 · 업종변경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재협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 저수지 상류부 공장설립 제한지역 기존공장 업종변경 등 협의절차 간소화

개선 공장의 증축, 개축, 업종변경 후에도 오수 등 오염 부하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절차의무 간소화로 처리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8.12월)

? 국가는 되고 기업은 안되고?

현황 국가 · 공공기관과 달리 기업 및 개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등을 설치하지 못함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오염등의 유발 가능성이 낮은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정비 추진

- 해수부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18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19년)

? 기숙사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되고?

현황 지식산업센터 내에 상주하는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기숙사는 센터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지원시설에 불포함

!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개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추가

- 산업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하)

? 작은 공장은 산단 입주하지 말라고?

현황 산업용지 분할면적 최소기준은 900~1,650㎡ 이상으로
과다해 소규모 공장이나 영세 사업자 입주애로 상당

!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기준 완화

개선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 분할할 경우, 산업용지 분할면적
최소기준을 900㎡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 소기업 및 소공인
산업단지 입주지원 허용

- 산업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7.하)

? 삭제된 법규정으로 짐용료를...

현황 이미 삭제된 지방세법 제197조 '농지소득금액'을 근거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비용부담 가중



!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개선 삭제된 법규정을 근거로 하는 조례 개정

- 57개 지자체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18.하)

? 내지도 않는 농지세 납기일이 기준?

현황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하천 점용료 징수시기를 폐지된 농지세 납기('10.1월)로 규정하여 점용료 징수



!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하천 점용료 징수시기 개선

개선 폐지된 농지세 납기를 징수시기로 하고 있는 54개 조례 개정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18.하)

? 점용료 급격히 올려도 조정기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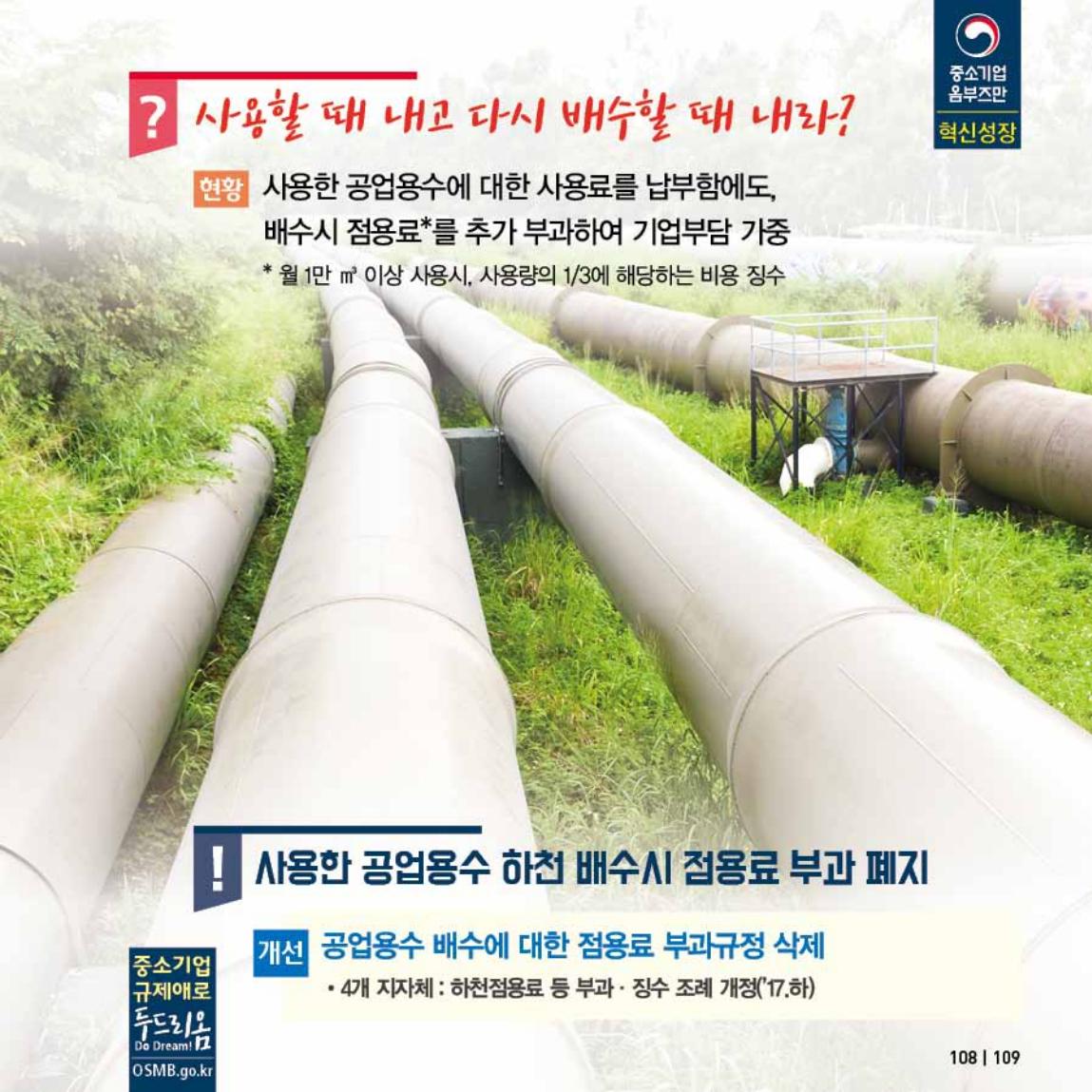
현황 2년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여 사용시 전년 대비 점용료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 부담 가중



? 사용할 때 내고 다시 배수할 때 내라?

현황 사용한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함에도, 배수시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여 기업부담 가중

* 월 1만 m^3 이상 사용시, 사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비용 징수



! 소하천점용료 조정 기준 마련 또는 완화

개선 소하천점용료 조정 기준이 없는 지자체는 기준 마련,
증가율 20% 이상 설정한 31개 지자체 기준 완화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18.하)

! 사용한 공업용수 하천 배수시 점용료 부과 폐지

개선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 삭제
• 4개 지자체 :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17.하)

?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으로?

현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으로 규정되어 사용하지 않는 양에 대해서도 납부하여 비용 부담 가중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현실화

개선 과거 하천수 사용실적 등을 토대로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

- 국토부 : 관련 연구용역 추진('17.하), 하천법 시행령 개정('18년)

? 전시시설 다 있어야 하나?

현황 특별시 ·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내 자동차 매매업자는 전시시설 구조**를 설치하여야 함

*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관악구, 달서구, 부평구, 남동구, 인천서구

** 자동차매매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설 또는 전시용 유리창 형태의 사업장 외벽을 갖추어야 함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기준 적용 제외

개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구청장이 전시시설 구조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선

- 용지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거 · 도시미관과의 조화 여부로 판단 (예시 : 공업지역 등)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7월)

? 직업소개소 면적은 6평 이상이어야

현황 직업소개사무실은 전용면적 2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갖추도록, 영세업자들의 사업기회 제한



! 유료직업소개소 시설기준 개선

개선 변화된 사회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독립구조 및 전용면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

- 고용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8.하)

? 예전 시설·장비기준에 돈만 들어

현황 치과기공소 장비보유 기준이 3D프린터 등 신기술 및 첨단 장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업계 불만

* 14가지 필수장비 구비시 3천만원이 소요되나 교정용 장비 3개만 구입할 경우에는 8백만 원 소요



!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요건 현실화

개선 치과기공 기술발전 등을 고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시설 및 장비 기준 현실화 반영

- 복지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12월)

? PC방 VR게임해도 높은 칸막이는 안돼

현황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불가

* 큰 움직임이 없는 PC게임과 달리 VR을 이용한 게임은 온몸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아 사용자간 충돌방지를 위해 좀더 높은 칸막이 필요



! VR 게임제공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완화

개선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문체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7.8월)

? 이미 충분한 장비가 있는데 또 다시

현황 체인블럭이나 호이스트크레인이 없더라도 이동식 크레인만 있으면 건설기계 정비가 가능하나,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기준* 강화로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보유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으로 명시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개선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면 체인블럭이나 호이스트크레인이 없더라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가능

- 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월)

? 신생·소규모 기업은 전문기업 안되나?

현황 뿌리기술 전문기업 선정 기준에 매출액 규모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업력이 짧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 등은 전문기업 지정 어려움

* 평가요소 : 기술수준 100점 + 경영역량 100점 (매출액 기준 40점, 업력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이익률 · R&D 비율 · 자산 회전율 각 10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평가기준 합리화

개선 기술력은 우수하나 업력이 짧아 재정기반이 약한 취약한 중소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 기술역량 및 경영역량 평가비중 검토,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등의 평가 구간 및 배점 검토 등
- 중기부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개정('18.상)

? 겸업하려면 칸막이부터 해라

현황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반찬가게, 떡집 등)과 식품접객업을 (일반음식점 등) 겸업하려면 벽 · 칸막이 모두 설치해야 가능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제과점업 등)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과 분리(벽) · 구획(칸막이) 이외 구분(선)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15.12월)하여, 플라워카페, 은행-커피숍 등 다양한 습인술 영업이 적은 시설비용으로 가능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개선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과 식품접객업 겸업 시 비용 부담이 적은 구분(선) 설치 허용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7.12월)

? 음식점, 식품가공업 주방 같이 쓰면 안되나?

현황 1명의 영업자가 음식점을 하면서 미숫가루 제조 판매를 위한 즉석판매제조업을 하려면 별도의 조리장을 갖추어야 함



!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도록 규제 완화

개선 동일 영업자가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일반 음식점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 주방 사용 가능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7.12월)

?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현황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수 기술 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출자비율 완화

개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기준을 현행 20%에서 10%로 개정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하)

? 승강기 없는 건축물은 덤휴이터 매달검사?

현황 승강기 설치 의무시설*의 덤휴이터**는 3개월 1회,
그 외 시설의 덤휴이터는 1개월 1회 자체점검 의무

* 다중이용시설 및 6층이상 건축물 등

** 사람이 타지 않는 적재용량 300kg이하 승강기



! 덤휴이터 자체점검 실시기준 완화

개선 모든 덤휴이터 점검주기를 3개월에 1회이상으로 일원화

• 행안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8.12월)

? 연구원 창업 휴직이 왜 이리 짧나?

현황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이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통상 2~3년의 휴직만 가능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5+1년으로 확대

개선 벤처기업법의 휴직규정과 동일하게 연구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5년(연장 1년)으로 확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과학기술원(KAIST) 등 21개 기관 : 내부 규정 개정('18년)

? 연구원 기업겸직 기간도 최대 3년만?

현황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이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려면 2~3년의 겸직만 가능하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공립연구기관 등 연구원의 겸직기간 제한규정 삭제

개선 연구원 창업으로 인한 겸직기간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 과학기술원(KAIST) 등 11개 기관 : 내부 규정 개정('18년)

? 국내 학회는 되고 국제학회는 안되나?

현황 R&D 사업 수행시 학회 참여에 있어 미래부, 산업부 등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나, 중기부만 국내로 제한하여 기업활동에 애로



! 기술개발지원사업 학회활동 인정범위 확대

개선 기술개발 기간 내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학회 활동을 인정하고, 연구활동비로 집행허용

-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18.상)

? 협동로봇 동작허가 장치 꼭 있어야 하나?

현황 산업용 로봇에 대한 위험기계 · 기구 제작 및 안전기준이 협동로봇 사용환경에 맞지 않고,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로봇산업 활성화 제약 및 불편야기



! 산업용 협동로봇 제작·안전기준 현실화

개선 산업용 로봇 펜던트제어 활성화 장치 예외 규정 제정, 협동운전요건은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 안전설계 및 안전정격 제한기능 활성화 등 동작허가 장치를 대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작허가 장치 없이 사용 허용
- 고용부 : 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17.9월)

? 동일라인·방식 물티슈라도 신고는 따로

현황 물티슈 제조업이 사람용(화장품), 애완동물용(의약외품)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동일 라인의 동일 성분일지라도 의약외품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신고

* 제조등록/허가, 제조판매관리자 선임 등



! 사람용·동물용 물티슈 제조업체 중복규제 완화

개선 ‘사람용 물티슈’ 제조의 경우 ‘동물용 물티슈’와 동일 방식, 동일 성분으로 제조할 경우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사항으로 갈음

- 제조품목 신고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신고절차 진행
- 농림부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조건 내부자침 제정('17.하)

? 소독은 분무방식으로만 해라

현황 펫사료 완제품 검역소독이 소독약 분무방식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으며, 포장지 곰팡이 발생 등 제품 훼손 우려



! 완제품 펫사료 검역 소독방법 합리화

개선 펫사료 소독시 소독효과는 높이면서 제품포장 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방법 합리화

- (소독약) 훈증, 자외선 등, (방법) 사료박스 전면이 소독약에 노출
- 농림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7.하)

? 안전도 평가가 상대평가?

현황 축산물 도축장 자체안전관리 인증평가 공개방식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인증평가에 대해 부담

* 평가판정 : 상 · 중 · 하,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부적합



! 축산물 도축장 안전관리인증 평가 방식 개선

개선 도축장 자체안전관리인증 평가방식을 적합 · 부적합 등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

- 농림부 : 안전관리인증 평가결과 공표시 반영('17.하)

? 신제품은 임의로 가격 산정?

현황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시 가치평가제*를 실시하나,
동일목적 제품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임의산정
배수(수입원가 X 1.78)가 적용되어 적절한 금액산정 불가
* 동일목적 제품 등재시 기 제품과 비교하여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입증여부에 따라 10~100% 가산



! 치료재료 상한금액 임의산정배수 합리화

개선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상한금액 임의 산정
배수 개선

- 복지부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17.하)

?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차인데 과태료?

현황 영양성분 표시가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재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업부담

*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원물의 수확 계절,
사용부위의 조직 구성에 따라 일정량의 오차가 발생



!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개선 2개 이상의 식약처 공인검사기관 측정치 평균값을 표시하면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식약처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18년)

? 필요없어도 생산공정 가지고 있어라

현황 터치스크린 제조기업이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시
생산공정 중 불필요한 패턴제너레이터를 갖추어야 함



! 터치스크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개선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시 생산공정과 큰 연관성이 없는
패턴제너레이터 구비요건 삭제

- 조달품질원 : 품목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개정('18.1월)

? 없어도 되는 민간인증 받아오라

현황 정부조달 개인컴퓨터의 경우 행정업무용 다기능기기 표준
규격에 따른 시험검사를 실시함에도 불필요한 민간인증
(K 또는 Q마크)을 추가로 요구하여 인증비용 부담 상당



! 정부조달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인증요건 제외

개선 정부조달 참여시 개인컴퓨터 직접생산 확인 요건 중 K 또는
Q마크 인증취득 삭제

- 중기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7.9월)

? 적격심사인데 최저가낙찰제로…

현황 전시부스 설치입찰은 일반용역으로 적격심사(또는 협상계약) 입찰이 타당하나, 최저가낙찰제(물품임대)로 진행하여 과도한 출혈경쟁 초래



! 지자체 출자기관 전시부스 설치입찰 최저가낙찰제 폐지

개선 전시부스 설치 관련 입찰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낙찰하한율)를 적용하여 적정이윤 보장

• (주)엑스코 : 입찰공고문 반영('17.8월)

? 같은 공장인데 중복 인정 안돼

현황 인쇄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속품인 금속표시물의 경우 금속제품과 인쇄 · 광고물에 대해 각각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부담 불가피

* 직접생산 확인시 공장의 다수 품목 중 다른 제품군(24개)간은 생산공장 면적·시설·인력의 중복 인정 불허



! 금속 표시물의 직접생산 확인 제품군 분류 개선

개선 금속 표시물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시 '인쇄 · 광고물' 외 '금속' 제품군으로 중복 인정하여 기업부담 완화

- 단, 공청회를 통해 중복 인정여부 검토 계획
- 중기부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고시) 개정('18.12월)

? 여러 품목 생산하면 따로따로 설비 갖춰라?

현황 13개로 세분된 ‘기계’ 산업군 내에서 다수의 다른 제품군의 품목을 생산할 경우, 각각의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 기업부담 가중



! 기계 제품군간 직접생산 확인요건 중복 인정

개선 직접생산 확인시 ‘기계’ 제품군 상호간에 생산공장 면적 · 생산시설 · 인력 등 요건을 중복 인정하여 기업부담 경감
· 중기부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고시) 개정('18.12월)

? 선박 강선 만드려면 상가선대 있어야...

현황 육상 건조 선박 강선은 상가선대를 반드시 보유해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 가능



! 강선 직접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보유기준 완화

개선 300톤 미만 선박 강선은 상가선대 보유 요건 제외
· 중기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7.12월)

? 고용인원 증가율 기준 하나?

현황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고용률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차별 야기 규제

*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혹은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아래도 예외, 저래도 예외...

현황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면제 인정조건이 추상적으로 명시, 실구매율은 낮은 설정



! MAS 고용우수기업 가점제도 개선

개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을 대기업(3% 이상), 중기업(4% 이상), 소기업(5% 이상)으로 개정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17.하)

!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예외조항 제한

개선 의무구매 면제 인정요건 중 현저히 낮은 경우 개선

• 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17.하)

? 내 책임도 아닌 기간으로 기한초과

현황 조달 선박 납품*시 납품기한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는 도면승인 기간이 포함되어 선박 제작기간 부족으로 납품기한 초과

* 입찰 → 설계 → 도면승인(선박안전기술공단) → 제작 → 납품



! 선박 도면승인 기간을 고려한 납품기간 연장 허용

개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합의된 선박도면 승인기간 만큼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근거를 입찰공고서에 반영

- 조달청 : 조달청 입찰공고 반영('17.6월)

? 서류발급 요청했더니 받을 수 없는 서류 요구

현황 위해우려제품 수출용 자유판매 증명서 신청시 수출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해외구매처에서 계약전 서류발급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에 차질



!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완화

개선 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 자정 및 안전 · 표시기준 개정('18.상)

? 식용곤충은 사료로 쓰면 안되나

현황 식용곤충은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식품원료임에도 단미사료로 활용하는 사료용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업계 매출증대 악영향

* 갈색거저리유충, 쟁별귀뚜라미, 메뚜기



! 식용곤충의 단미사료 인정범위 확대

개선 식용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하여 단미사료(사료용 곤충)로 포함

- 농림부, 농진청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17.하)

? 기업분할됐다고 산업요원 내보내야

현황 병역지정기업 물적 분할시 기업분할 신규법인에 병역 지정업체 권한이 승계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발생으로 생산활동 차질



! 기업분할 신규법인의 병역특례업체 승계 합리화

개선 기업분할시 분할된 신설법인도 병역지정업체 승계대상에 포함

- 분할된 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해당분야 복무가 가능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병무청 : 행정지침 시행('17.4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관리규정 (훈령) 개정('18.상)

? 청년창업자금 평가내용은 깜깜이

현황 청년전용창업자금 평가기준 비공개로 사전에 평가 준비하기 어렵고, 탈락 시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움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너무 적어

현황 '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이 적어 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

* 1차 기본계획('15~'17년) : 5개 부문, 23개 업종, 525업체를 대상으로 총 16억 8천만톤을 사전 할당량으로 설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개선 '14년 기 결정한 '17년도분 할당량을 1,700만톤 상향조정하고 조기감축실적 인정차원에서 5,100만톤 추가 할당

- 거래시장에서 배출량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할 때 정부 보유물량을 시장에 유동 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 조치
- 기재부 : '17년도 할당계획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7월)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대상 기업평가기준 공개

개선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홈페이지에 공개

• 중진공 : 홈페이지 반영('17.8월)

? 대행 좀 하고 싶은데 지원 많다고 안돼

현황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으나, 보험사무 위탁 사업주 범위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됨

!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가능 사업주 범위 확대

개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한 고용·산재보험사무 위임처리 가능

- 고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하)

? 화학관련 기술인력 고용부담 너무 커

현황 10인 이상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기술사나 동등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인 이상 고용 의무화 규정으로 고용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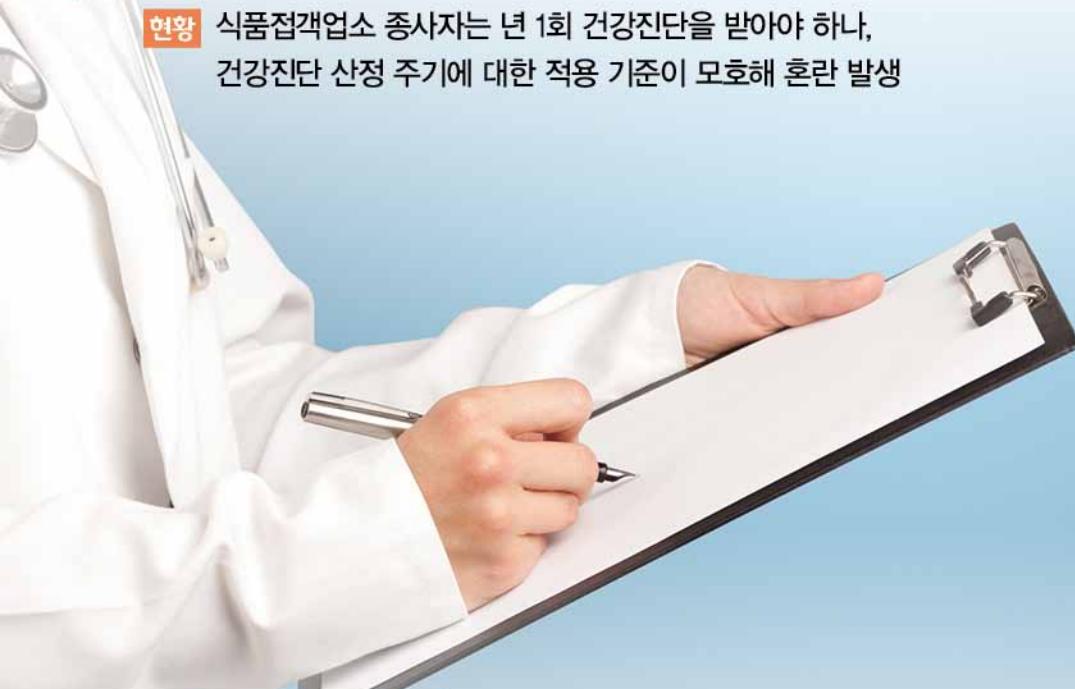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기술인력 경력기준 완화

개선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경력기준 등을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거쳐 완화할 계획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년)

? 건강진단 기준이 뭐야

현황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 산정 주기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해 혼란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명확화

개선 건강진단 산정주기를 '검진일'로 적용하도록 유효기간 명시
• 식약처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18.상)

?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는 다쳐도 되나

현황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아 보험가입 및 재해보상 등이 가능하지만,
사업주 가족은 가입이 불가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



! 소규모 사업주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험 가입 허용
• 고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8.하)

? 지원받으려면 공장임대는 3년은 되야

현황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공장임대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이 필수 요건

? 근로자 수가 적음 지원신청도 안돼

현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참여요건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으로 참여 제한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

개선 공장임대시 3년 이내인 경우에도 동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중기부 : ICT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개정('18.1월)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

개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중 창업 후 1년 미만 초기기업,
정부지정 모범사업체,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우선 지원

- 고용부 : 인력공단 운영지침 개정('18.상)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 601일

2018년
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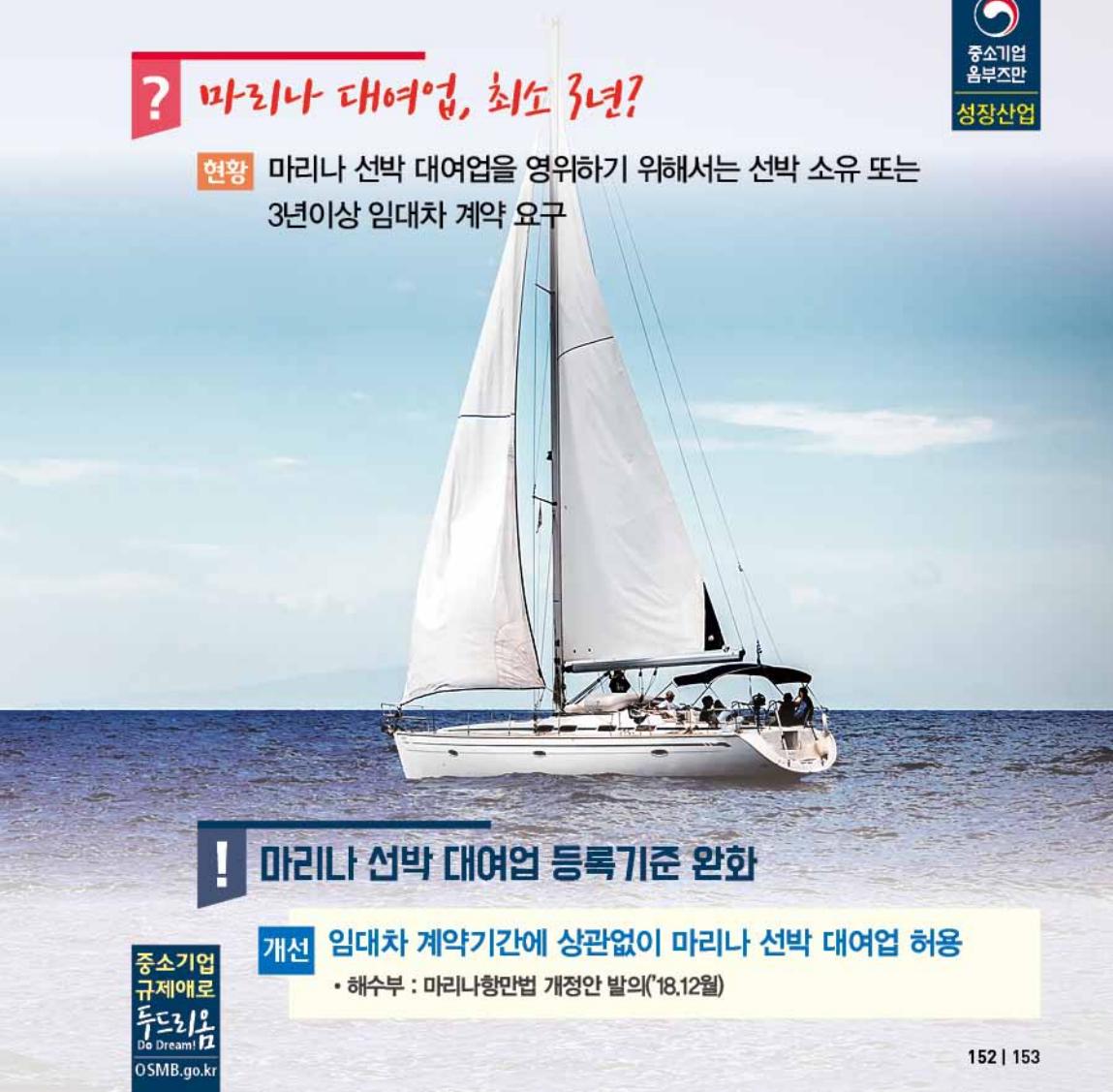
1.

성장산업 현장밀착 규제혁신

01. 관광·레저·게임산업 성장촉진
02.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03. 수요창발산업 규제개선

? 마리나 대여업, 최소 3년?

현황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 또는 3년이상 임대차 계약 요구



!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개선 임대차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 해수부 :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발의('18.12월)

? 주거·공업지역은 문화향유도 안돼?

현황 전시시설 · 국제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가능



!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개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시시설 설치 가능 지역을 지자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제2, 3종 주거 · 공업 · 생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
- 국토부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8.12월)

? 사파리공원이 있어야 전문 휴양업 가능해

현황 동물원 운영자가 전문 휴양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파리 공원 설치가 필수요건



! 동물원의 전문 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개선 사파리공원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원도 전문 휴양업으로 등록 허용

- 문체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3월)

? 용도 맞지 않은 지역이 일부라도 무조건 설치불가

현황 유원지는 준주거 · 일반상업 ·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 지역에 설치 가능하고,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 · 보전 관리지역인 경우도 설치 가능 하지만, 준주거 · 일반상업 ·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는 규정이 없어 유원지 설치에 애로

*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규제 완화

개선 준주거 · 일반상업 ·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도 생산 · 보전 관리지역이 유원지 전체면적의 10%이내인 경우는 설치 가능
 • 국토부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8년)

? 하천변 활용해 레저사업 하고 싶어요

현황 하천변에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불허



! 하천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허용

개선 하천의 외형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허용
 • 국토부 : 하천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소방위한 긴급비행도 신속절차가 안돼

현황 소방용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야간 비행 시 사전승인, 인구밀집지역비행금지 등 항공안전법 규제 적용으로 화재진화 등 긴급비행 목적달성을 한계



! 소방용 드론 항공안전법 적용규제 완화

개선 긴급상황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유선통보 후 비행), 인구밀집 지역 사전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정비

- 국토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8년)

? 폭발성 적은 소형배터리도 폭같이

현황 배터리 물류는 화물운송이 거부됨에 따라 폭발성이 적은 소형배터리도 까지도 운송이 거부되어 불합리 제기

* 리튬이온에 비해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폭발성이 적음



! 무인이동체용 소형배터리 선박운송 제한 완화

개선 UN38.3(국제화물운송)인증에 따라 화물물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해수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수부령) 개정('18.3월)

? 전체 면적만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

현황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 개발면적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로 적용됨



?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은 어디에

현황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 견인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교육 등이 부재하여 사고 발생 위험



!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실질 개발면적으로 하는 사업에 숲속야영장시설 추가

- 산림청, 환경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령 개정('19.3월)

! 수상스키 등 견인 레저기구에 대한 규정 마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견인기구)가 지켜야 할 운항규칙 등 안전 교육에 관련 규정 마련

- 해경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년)

? 서핑은 수상체험인지, 일반체험인지?

현황 수상형 연안체험활동은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않는 수상활동으로, 수상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으로 구분되나 기구 용어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 애로



! 연안체험활동 유형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개선 다양한 유형별 연안체험활동의 구분을 위해 '기구'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 해경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년)

? 기업작다고 등급도 못 정해

현황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신생업체 등 혁신기업 출현 저해 요소로 작용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개선 혁신기업 출현을 위한 진입장벽 최소화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중 선택권 제공 마련

- 문체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년)

? 폐업시 다시 신고증 발급해야만 하나

현황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은 폐업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 이에 분실시에도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해 기업 불편 초래



! 게임제작·제공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개선 등록증 등 분실시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게임제작 및 게임 제공업 등 폐업신고 가능

- 문체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년)

? 열기구는 고정형으로만 가능한가?

현황 고정형 · 계류형을 제외한 운항용 열기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이 제한



! 운항형 열기구 등록 허용

개선 운항형 열기구 등록, 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국토부 : 세부기준 마련('19.6월)

?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르는 휴식년

현황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상한 · 사전예고일을 고지하지 않아, 캠핑장, 음식점 등 관련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저해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사전고지 도입

개선 휴식년제 시행 1년 전까지 사전고지 실시

- 산림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19.6월)

? 이용객수와 상관없이 안전요원은 2명

현황 수영장 면적 · 이용객수 · 강습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안전요원 배치인원 최소 2명 요구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 문체부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 여행업 창업하려면 2억원?

현황 여행업 자본금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를 우려



!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개선 일반여행업 2 → 1억원, 국외여행업 6 → 3천만원,
국내여행업 3 → 1.5천만원으로 항구 완화

- 문체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8.7월)

? 높이용 드론도 국방, 보안 위험?

현황 취미 · 레저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의 경우에도 비행이 제한되어, 학교 운동장 같은 곳도 비행이 곤란하여 드론산업 활성화 저해



! 저위험 드론(완구·레저용) 비행규제 완화

개선 완구 · 레저용(250g) 등 저위험 드론의 경우 일정 요건 준수시
공항주변(5km, 잠정) 외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허용

- 국토부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6월)

? 산단 지원시설구역은 태양광 설치 못해

현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산업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에서만 가능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으로 구분



!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태양광발전 시설 전면허용

개선 지원시설구역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 산업부 : 각 국가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상시 개정('18년)
 - 34개 국가산단 중 4개 국가산단 변경완료

? 신재생에너지 공유지는 되고 국유지는 안 되고

현황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50% 내에서 사용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포기 사례 발생



! 신재생에너지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개선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사용요율 감면(5→1%)

- 사용요율 감면 외 사용기간도 확대(최장 20년→30년) 예정
- 산업부, 기재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18년)

농업진흥구역, 새 건물은 태양광 설치못해

현황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는 '15년 이전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개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개정('18.6월)

택지지구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려면 하세월

현황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유지의무*로 연료전지설비 보급이 불가능

* 330만㎡ 이상 신도시는 10년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설치 불가능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설치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 국토부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훈령) 개정('18년)

?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없어 상용화 가로막아

현황 수소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나 안전등 세부기준 미비로 설치 난항



!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개선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일본 등 해외사례 검토후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준 마련

- 산업부 : 이동식 수소충전소 특례고시 제정('18년)

?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하고 싶으나 비용이

현황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를 위하여 국공유지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비싼 사용료 및 대부료 등으로 민간사업자들 기피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시 국공유지 사용료 등 완화

개선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국공유재산의 특례규정을 참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료 · 대부료 완화

- 산업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 작지만 불편한 의료기기 외장용기 표시규제

현황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제조·수입업체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형 공장의 여러 호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기 곤란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대표주소 기재 허용

개선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제조·수입업체의 대표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약처 :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18년)

? 유전자치료 하지 말라는 말인가

현황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치료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치료법이 없을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해서 연구개발에 차질
*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 제한 없으며, 일본도 최근 질환제한 삭제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 완화

개선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질환 제한 검토 및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 보관은 되도 열람 및 신청은 불편하게

현황 관련법령 개정으로 진료기록 클라우드보관은 허용되었으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의료기관 직접 방문 불가피



! 클라우드보관 진료기록 온라인 열람·사본신청 허용

개선 휴대전화 또는 공인전자서명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진료 기록 사본 온라인 신청 허용

- 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8년)

? 인증기관 없이 협동로봇 활성화가 되나

현황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매트 및 방책 실사를 면제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국내에 협동로봇 설치인증기관이 없어 협동로봇 활성화 저해



! 스마트공장 협동로봇 안전인증 도입

개선 로봇산업진흥원 민간임의인증으로 협동로봇 설치 안전 인증제도 마련

- 산업부 : 협동로봇 설치 안전 인증제도 마련('18.6월)

? 첨단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첨단업종 관련법률

현황 산집법상 첨단업종은 85개 업종(142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 신기술·신산업(드론 제조업 등) 반영 누락



! 산집법상 첨단업종에 신기술·신산업 반영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선정기준 재검토

- 산업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19년)

? 비영리이나 일상이 동의를

현황 개인정보를 연구개발을 위한 분석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해 연구개발을 위한 분석자료(빅데이터) 수집·활용에 상당한 애로



! 연구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개선 연구목적, 통계작성 등의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 허용하고, 단, 고의적 재식별 이용시에는 엄중처벌

- 행안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8년)

? 파이프는 되고, 연결구는 심사기준 없어 안돼

현황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이음관은 성능이 우수함에도 인증심사 대상재질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PE-X 파이프는 KS표준이 있으나, PE-X 이음관은 없음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이음관 표준 개정

개선 이음관에 사용되는 사출용 재료(수지)의 국내시장 확산 필요성에 따라 PE-X 이음관 KS표준 개정

• 국표원 : PE-X 이음관 KS표준 개정('19년)

? 개량제품이 아닌 신제품은 성능인증 불가

현황 현행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비교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기존에 없는 신제품 평가기준으로는 성능인증이 불가

* 3개 항목 : 성능 개선도, 개선 난이도, 생산·가격 경쟁력



! 신제품 성능인증 별도 심사기준 마련

개선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별도의 적합성 심사기준 마련

•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8.12월)

? 보다 잘 연구하려는 것을 막아

현황 연구시설용지에는 연구시설 외 마케팅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에 장애



! 연구시설용지에 소규모 생산시설 입주허용

개선 연구시설용지 내 마켓테스트용 시제품 생산을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500제곱미터 이하) 설치 허용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관리기본계획 변경('18.10월)

? 작은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에 긴 세월

현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련 전기사업허가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허가기간 장기화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개선 시설용량 3M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 산업부 : 전기사업법 개정('19년)

? 주변지역은 무조건 5km?

현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시, 지원대상 주변지역의 범위가 넓고, 지원주체 발전소 용량이 낮아 활성화를 제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준 완화

개선 연구용역(~'18.12월)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기준 변경

- 산업부 : 발전소 주변지역법 및 시행령 개정('19.6월)

? 첨단기술제품 30% 이상 되어야만

현황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30%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나,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30% 이상은 현실적으로 곤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개선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비중을 현행 30% →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첨단기술기업 확대 및 특구 내실화

- 과기부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9년)

? 벤처육성진지구는 지역거점 안되나

현황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참여 불가

*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대상에 포함

개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신청소재지에 포함

- 단, 동 사업은 일률('20년)에정 사업으로 재기획을 통한 예비타당성 통과 시 반영 예정
- 산업부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부훈령) 개정 ('19.6월)

? 너무 넓은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원자력연구원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대전지역 내 고기능 비행테스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해 고기능 드론의 시험비행에 애로 발생



!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신설

개선 대전지역 드론업체 시험운영 편의제공을 위해 비행금지 구역 내 드론공역(드론공원) 설정

- 드론공역을 위한 자상시설물 설치('18.11월), 시험운영('18.12~'19.5월)
- 국토부 :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공역 신설('19.6월)

? 같은 이차전지라도 리튬은 되고 레독스는 안돼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여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결합하는 전력저장장치(ESS)'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로 제한, 레독스플로우 기타 배터리 개발을 저해



!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전력저장장치(ESS) 범위 확대

개선 리튬이온전지 외 레독스플로우, 납축전지 등 기타 배터리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 적용 전력저장장치(ESS)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중('18.7~)
- 산업부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 센터공고) 개정('19년)

? 건축물이 다 다른데 외벽기준은 하나

현황 민물양어장과 같이 기능 상 외벽이 없는 구조물의 경우,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가중치 적용 곤란

*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 태양광발전설비(3천kW 이하)는 가중치 1.5 적용



!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부여 건축물 외벽기준 탄력적용

개선 건축물 형태 다양화,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외벽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예) RPS운영위원회를 통해 외벽기준 적용 · 미적용 여부최종 결정
- 산업부 : 외벽기준 적용여부 등 선별적 기준 마련('19년)

? 시뮬레이션 형태는 체육시설 인돼

현황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의 경우 현행 법령상 체육시설로 분류 부적합



? 곤충사육은 되고 곤충체험·전시는 안되고

현황 곤충은 전시·판매가 일괄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전시·판매 시설물은 입지 불가



!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

개선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신설 및 업종별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규정

- 문체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전시시설 입지허용

개선 곤충전시관 건립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검토 후 입지허용 실시

- 농림부 :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시 실시('19년)

? 같은 기자재, 농사는 되고 식물공장은 안되고

현황 농사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또는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나,
식물공장 기자재는 농업기반시설임에도 적용 제외



! 식물공장 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 적용

개선 수직형농장 실증사업('17~'18년) 종료 후,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이 확인된 식물공장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적용

- 농림부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19년)

? 샵인샵, 만드는 것이 왜 이리 까다로운지

현황 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샵인샵이 허용되나,
다른 영업장과의 시설·설비 분리 기준이 없어 혼란

* 복합매장(Shop – in – Shop)



!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 정비

개선 공중위생영업장을 활용한 복합매장 운영시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 분리 : 벽·층 / 구획 : 칸막이·커튼 / 구분 : 선·줄
-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 음식점 공간 내 제과점 만드는 것이 왜 안되는지

현황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 제과점을 복수사업자가
동일 영업소에 운영시 독립된 건물 · 층 등으로 분리 의무



!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

개선 동일 영업소 내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이 위치
하는 경우 구획 · 선 등만으로도 구분 가능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 소상공인은 직업소개소 같이 하면 안되나

현황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 및 숙박업자의 경우 직업
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여 사업다각화 장애



! 소상공인의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규정 완화

개선 제과점 등 공중도덕상 위해가 없는 소상공인*에 한해
직업소개소 겸업 허용

- 식품접객업 중 단란 · 유통주점영업 등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영업(일부),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 고용부 : 직업안정법 개정('18.4월) 및 시행령 개정('18.10월)

? 재제조 항목 안에 있는 것만 재제조?

현황 재제조 대상제품은 산업부와 환경부 협의를 통해 공동고시하는 제품만 해당되어, 미해당 시 품질인증 불가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정부지원 혜택에서 제외



!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제도 폐지

개선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 공동고시 제도 폐지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산업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 외국 자원만 먼저 재활용?

현황 국내 생산 폐지 등에 대한 재활용 자원 우선 사용 규정이 없어, 국내 재활용자원 가격붕괴 등 재활용업체 부담 발생



! 국내 재활용자원 우선 사용 규정 신설

개선 국내에서 생산 · 소비되고 수집된 재활용자원을 국내사업자가 우선 사용토록 관련규정 신설

- 환경부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자침(환경부고시) 개정('18년)

? 폐지는 국산부터 쓰면 안되나

현황 폐지는 연간 1천만톤 이상 수집되어 제지업계 원료로 사용, 제지업계가 국내폐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수집업계는 보관부지 부족으로 수집곤란 발생

! 국내폐지 우선사용 비율 확대

개선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률 상향 조정

- 환경부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18년)

? 재활용 촉진 않는 환경표지

현황 재활용제품 대외수출 부진, 공공기관 구매 미흡, 재생원료 판매처 부족 등으로 재활용업계 활성화 한계 및 중소기업의 재활용 기술개발 어려움 존재

! 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촉진

개선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재활용제품 확대 및 재생원료 이용률 명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촉진, 물질재활용 우선 정책 추진 및 제도화(R&D지원사업 등) 추진

- 환경부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19년~) 공공구매 수요확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18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18~'21년)

? 중간포장재는 재활용 안해도 되나

현황 재활용 의무대상을 소비자판매를 위한 최종제품 포장재로 한정하여 중간포장재는 재활용 불가, 영세기업 부담



! 중간포장재(마대, 용기 등) EPR 대상 유지

개선 중간포장재도 재활용의무 대상임을 명시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년)

? 작은 운동시설은 설치하지 말라는 말인가?

현황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바닥면적 500㎡ 미만인 운동시설은 설치 불가능

* 바닥면적 500㎡ 이상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학원은 설치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허용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 등
개선방안 마련

- 해수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19.7월)

? 해외 수출할려고 하는데 과거 수출실적이 있어야

현황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해외지점 설립을 엄격히 관리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

- * ①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 1백만불 이상 또는
- ②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 고려하여 필요성 인정한 경우



!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개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 요건 완화 방안 검토·추진

- 기재부 : 외국환 거래규정(기재부고시) 개정('18.9월)

? 발한실 따로 탈의실 따로

현황 체육시설내 발한실을 설치하여 목욕장업 신고시 체력단련장의 탈의실을 별도 구획없이 공동사용 불가



! 체력단련장내 발한실 설치시 탈의실 공동이용 허용

개선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정하여 발한실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탈의실 설치의무 면제

-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 가족영화관은 못 만드나?

현황 영화상영관 설치시, 최소면적(객석 30석, 바닥면적 60㎡) 등 시설기준을 요구하여,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 설치 제한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개선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설기준 개선방안 마련

- 문체부 :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 아케이드 게임기기 카드 안되나?

현황 아케이드 게임기는 동전, 지폐만 사용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은 불가하여 게임산업 활성화 저해



! 아케이드 게임기기 결제방식 다양화

개선 시행적 운영의 우려가 적은 게임물의 경우, 업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결제 도입방안 마련

- 문체부 : 개선방안 마련('19.3월) 등급분류개정 및 시행('19.6월)

? 곤충은 가축이 아닌가?

현황 최근 곤충사육 농가가 늘고 있으나, 곤충이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 지원정책 대상 여부가 불명확으로 농가에서 어려움 호소



! 가축 정의에 곤충 포함 명확화

개선 곤충사육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킴

- 농림부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부고시) 개정('18.8월)

? 동물영업자 비슷한 내용 교육 중복받아

현황 동물관련 영업은 동물판매업 등 6종으로 영업종별로 연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나, 다수 영업 영위 시 일부 교육내용이 중복되어 시간낭비

* 동물보호법령 체계, 동물보호 복지정책, 동물사육관리 및 질병예방



! 다수 영업 영위 동물영업자 교육 간소화

개선 다수 영업 영위 동물영업자에 대해 공통과목에 한해 1회
수강으로 교육이수 처리

- 농림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편('19년)

2.

소상공인 부담규제 맞춤개선

01. 각종 규제기준 합리화
02. 기업친화적 규제개선
03. 비용경감 및 시간단축

? 부숙토 쓰고싶어도 너무 엄격한 기준

현황 자원화 가능한 부숙토에 대한 조지사용량 제한
($1,000\text{m}^3$ 당 연간 4톤 이하)으로 재활용 곤란



? 성분이 좋아도 25°C 안되면 온천 아닌가

현황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C 이상 온수로서 인체에 무해한 최소한의 성분 기준을 규정

! 온천수 기준 합리화

개선 연구용역 · 해외사례 등을 참조(미국, 독일 등 20°C)하여 온천의 온도기준과 건강 · 효용 성분기준 개선 추진
 • 행안부 : 연구용역 및 대안 검토('19.12월)

? 장례식장서 밥 먹는데 문제?

현황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하여 외부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개선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음식물 등 조리 · 판매 허용
 • 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6월)

? 보전산지!, 농어업인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고

현황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는 농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임업인은 불가, 소득향상에 애로



! 민북지역 보전산지 임업인 시설설치 허용

개선 민북지역 보전산지 내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허용 대상을 임업인까지 확대

- 산림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8.11월)

? 농촌융복합사업자는 되고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은 안되고

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경우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체험관 등 농촌체험 및 편의시설 설치 불가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 * 농촌융합산업법 개정('17.3.21)으로, 음식점, 전시장, 일반·생활 숙박시설인 농촌융복합시설은 조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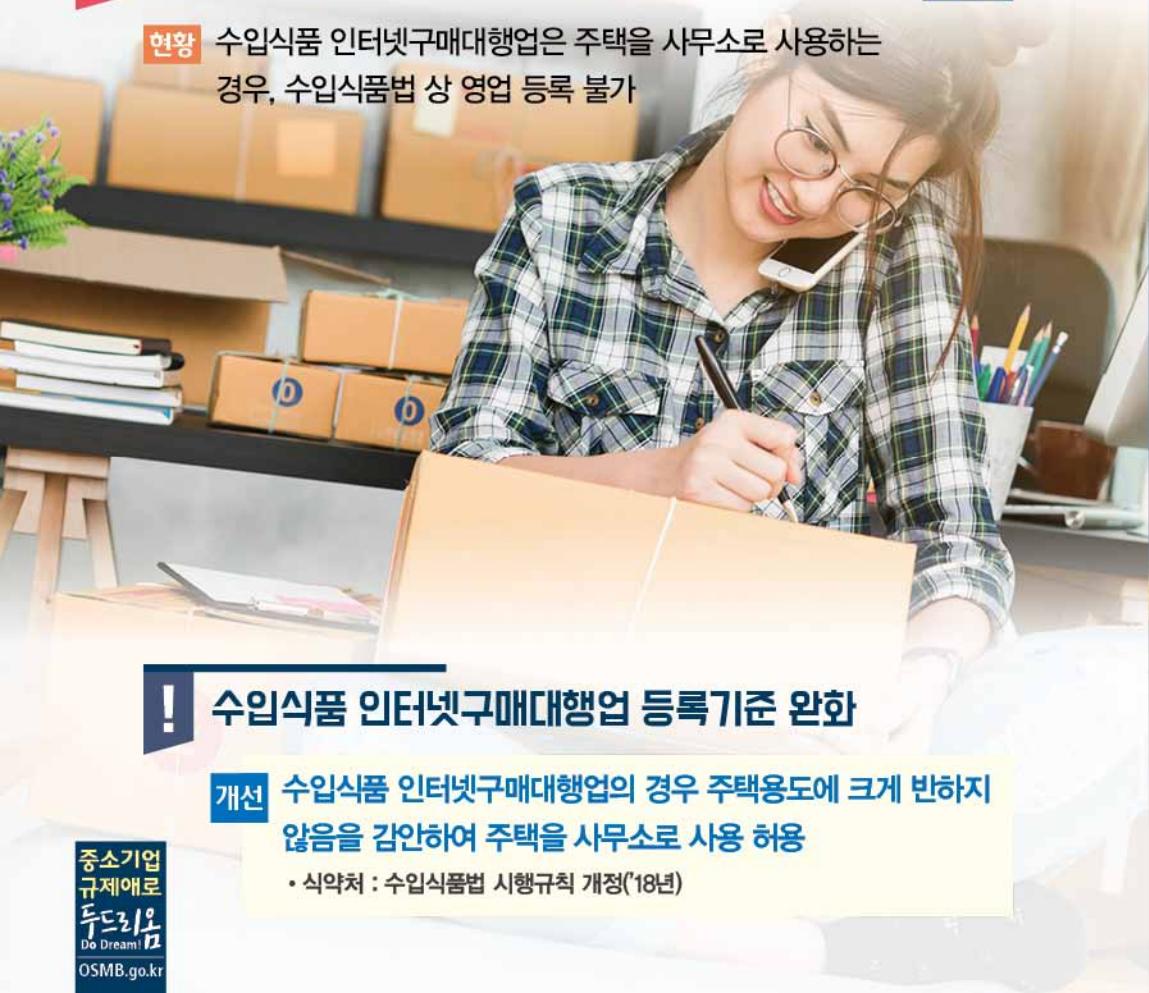
! 생산관리지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설치 허용

개선 농촌융합산업법과 같이 도농교류법에도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등 설치 허용 특례 규정 마련

- 해수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상)

? 주택은 사무소 안되나

현황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은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식품법 상 영업 등록 불가



? 고용창출기업, 산단 입주 힘드네

현황 산업단지 입주 시 첨단업종, 환경친화적업종, 수도권·해외이전업체 등 우선순위



!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기준 완화

개선 수입식품 인터넷구매대행업의 경우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 식약처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18년)

! 산업단지 입주시 고용창출기업 우선순위 부여

개선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추가
• 국토부, 산업부 : 산입법 시행령 및 관리기본계획 개정('18.12월)

? 산단에 도시형소공인 집적되도 집적지구는 안돼

현황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가 제외되어 기업 불편 발생

* 도시 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제조업의 입지특성 미반영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 포함

개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범위에 산업단지 포함

- 중기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8.6월)

? 업종분류에 맞지 않는 첨단업종 기준

현황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첨단업종 분류기준이 표준산업분류와 상이하여 기업불편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 명확화

개선 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분류 명확화 및 일치화

- 산업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년)

? 건폐율 특례가 만기?

현황 녹지·관리지역 기준공장 건폐율 40% 이하 특례규정이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준공장 부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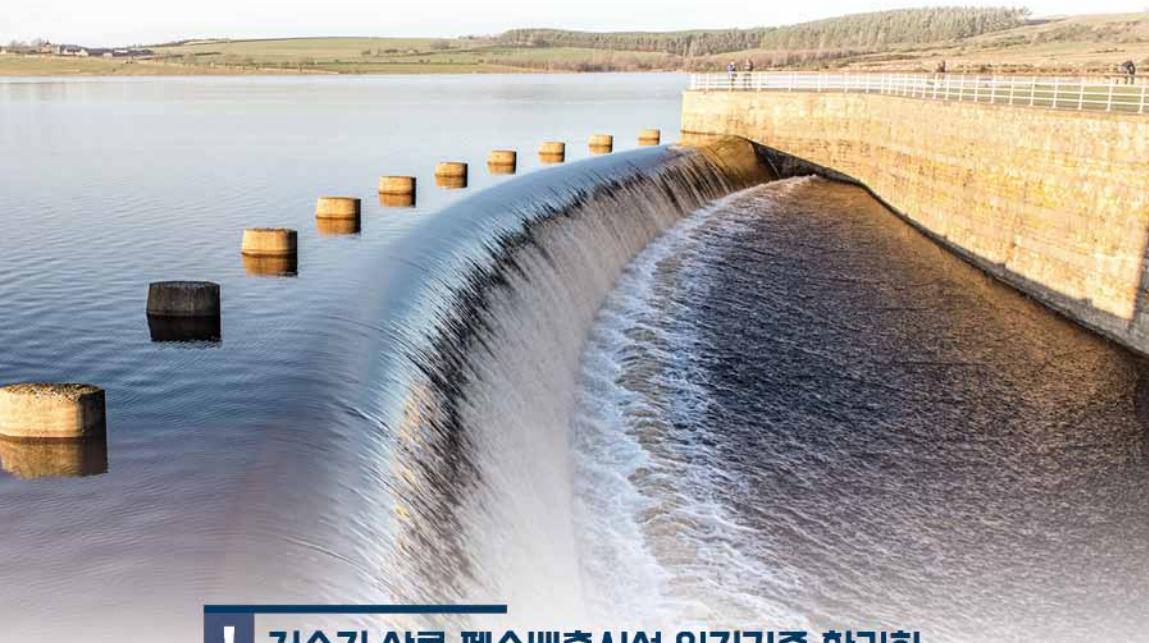
! 녹지·관리지역 기준공장 건폐율 특례 기간연장

개선 녹지·관리지역 기준공장 건폐율 40% 이하 특례규정을
2020년까지 연장

- 국토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0월)

? 저수지 상류에도 폐수 무배출 입지 안내

현황 폐수배출시설은 저수지 상류에는 설치 불가



!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 합리화

개선 폐수 無방류·전량 재이용·他수계로 방류할 경우 설치 허용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개정('18.6월)

? 근로자가 많아도 매출이 적은 기업은 어떻게 하나

현황 지방소도읍에 위치한 상시 고용인원 50인 초과 기업인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 면제기준 합리화

개선 우선 고용의무 면제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합리화

- 행안부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18.12월)

? 도급업체 구하기 어려운 유자격자 어떻게 고용하나

현황 도급업체는 종업원 10인 이상 시 일정 자격 외 실무경력 3~7년 기술인력 1인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해 창업 및 영세업체 사업확장에 애로



!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업체 기술인력 기준 완화

개선 30인 미만 영세업체 기술인력 기준 완화

- 기술인력의 자격 및 학력을 갖춘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5년 이상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화학 관련학과 졸업자가 화학물질안전원장 전문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 인정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 운영('18년)

? 선원업는 선박! 필요업는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현황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선원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 구비 필수



A
E
D

! 20톤 이상 선박의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완화

개선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부선은 자동제세동기의무설치
선박에서 제외, 법개정시까지 미설치 단속 유예
• 복지부 : 단속유예('18.5월)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 같은 정부, 다른 기준

현황 어린이제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함유시 산업부와 환경부간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중규제

* (산업부) 함유량 기준, (환경부) 전이량



!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

개선 어린이 건강보호 담보를 전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용범위와 기준치 등 고려하여 안전기준 일원화
• 산업부, 환경부 : 관련 고시 개정('19.6월)

? 직접생산 확인에 공장 면적기준이 웬 말

현황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 품목별(114개)로 공장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여 부담 야기

* 생산공장 면적 규정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제정시 면적기준을 10년째 유지하거나, 면적기준 규정을 강화해온



!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공장 면적기준 완화

개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조시설 면적 요건 변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면적기준 축소 · 폐지

• 중기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고시) 개정('19년)

? 생산시설은 임대하면 안되나

현황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 품목별(168개)로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보유는 불가

* 전체 품목 중 대다수인 82.4%(168개)는 임차보유 불인정, 17.6%(36개)에 대해서만 임차보유 인정



!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시설 임대보유 확대

개선 생산시설 직접보유로 인한 업계 생산현황을 반영하여 임차보유를 인정하는 품목 확대

• 중기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고시) 개정('19년)

? 인력적어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데...

현황 중기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 '직접 생산 확인기준' 중 인력기준이 과도하여 중소기업 부담



? 저장탱크는 강철판으로만

현황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을 화학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3.2mm 이상 강철판 등으로만 제작 가능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력기준 완화

개선 환경·기술변화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중기간 경쟁 제품에 대해 인력기준 완화

- 중기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고시) 개정('18.9월)

!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기준 합리화

개선 금속재질 외 강도·부식성을 고려하여 동등 수준의 적정 재질 인정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7월)

? 적격업체 선정할 수 없는 적격업체 평가기준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되지 않아 업체 선정에 애로

- * 가연성폐기물 포함시, 소각처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나 소각처리업체 수 부족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

개선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입찰 적격업체 선정토록 기준 개선

-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개정('18.12월)

? 실내건축, 2억원 있어야 공사 가능?

현황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2억원 이상'으로 요구하여 창의적인 신규업체 진입곤란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완화

개선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

- '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의견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
- 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년)

? 특수기술자종, 기술연수 기간이 너무 짧아

현황 해외투자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연수생의 국내 연수 기간은 6개월 원칙, 필요성 입증 시 1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을 허용하여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고려 부족



! 특수기술 분야의 기술연수생(D-3) 연수기간 연장

개선 기술연수 과정이 1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기술 직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확대

- 중기부와 협의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승인 하에 허용
- 법무부 :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대한 규정 (법무부훈령) 개정('19년)

? 너무 높은 온천 전문인력 기준

현황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중 전문인력 경력기준이 주로 5년 이상으로 과도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 진입 애로



!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기준 완화

개선 관련협회·학회 협의를 거쳐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의 업무경력 기준 완화

- 행안부 : 온천법 개정('19년)

? 창업보육이 지역현실 반영못해

현황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교육제도가 각 산업의 특성 및 지역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창업보육센터 설립 저해

* (지정요건) 10인 이상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 시설,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및 교육 지자체 이양

개선 지역 중심의 창업자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및 교육 등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 중기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19년)

? 기술진단은 오지 공단만

현황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어, 민간업체 진입애로 및 기술발전 저해



!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업 민간개방

개선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개방

- 시설, 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19.6월)

? 천일염하고 싶은데 입주안돼

현황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내 '국내유일 해양심층수로 만든 천일염' 염전을 설치하고자 하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제조업이 아닌 소금채취업은 입주 불가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내 천일염 염전 입주허용

개선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자체 승인을 거쳐 채취업 영위 허용

- 산업부 :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9년)

? 같은 모양·규격으로 창의적 옥외광고 가능하나

현황 가로등 현수기의 크기 등 표시방법*이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현수기 제작에 애로

* 가로 70cm 이내, 세로 2m 이내, 하단높이 지면으로부터 200cm 이상, 가로등 기둥 10cm 이내 밀착, 가로등 기둥 1개당 2개 이내 등



!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개선 현수기의 표시방법을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규정하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

- 행안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19년)

? 도시미관·안전을 이유로 한 현실에 맞지 않는 광고규제

현황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설치 규제로 자유로운 광고를 통한 사업활동에 제약

*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타사광고 불가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간판 설치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개선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방안 마련

- 행안부 : 대안 마련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19년)

? 출자금, 조합원수가 부족하면 지원신청도 불가

현황 농업법인이 농식품분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 영세한 규모로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 충족에 애로

*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의 농업인 확인 등



! 농업법인 지원요건 완화

개선 1년 이내 신생 법인의 출자금과 운영실적 요건 완화

- 농림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부훈령) 개정('18.1월)

? 더 면 지역은 되고 가까운 지역은 안되고

현황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내만 가능,
거리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



!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 합리화

개선 제과점이 동일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
(예. 5km)에 있을 경우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년)

? 이격거리 기준점은 어디에

현황 어린이집 설치시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격거리 산정기준이 불분명
* 보육시설용 건물인지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



!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외곽경계선)

- 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 특수조명기구! 손님이 원해도 불가

현황 노래연습장은 우주볼(mirror ball) 외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 불허



!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개선 청소년실을 제외한 일반실에는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 문체부 :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보관시에도 허가까지

현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작동시에만 방사선이 방출 되며, 이동 및 보관시에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음에도 판매허가를 받아야 해 기업 부담 상당



! 방사선발생장치(X-RAY) 판매허가 완화

개선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운반·설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제로 전환

- 원안위 : 원자력안전법 개정('19년)

? 1인 음식점, 산재보험 가입원해도 안 받아줘

현황 1인 음식점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특례 미적용



? 시설설치 전에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

현황 환경오염 우려시설은 인허가시(시설설치 前) 보험가입 의무



! 1인 음식점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개선 음식점 등 재해발생이 잦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및 중소 사업주(50인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고용부 :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19년)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기 조정

개선 가동신고시로 보험가입 시기 변경

- 환경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18.6월)

? 인정못받는 단체, 협상력 저하

현황 가맹점사업자는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으나, 단체구성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가맹본부는 협의에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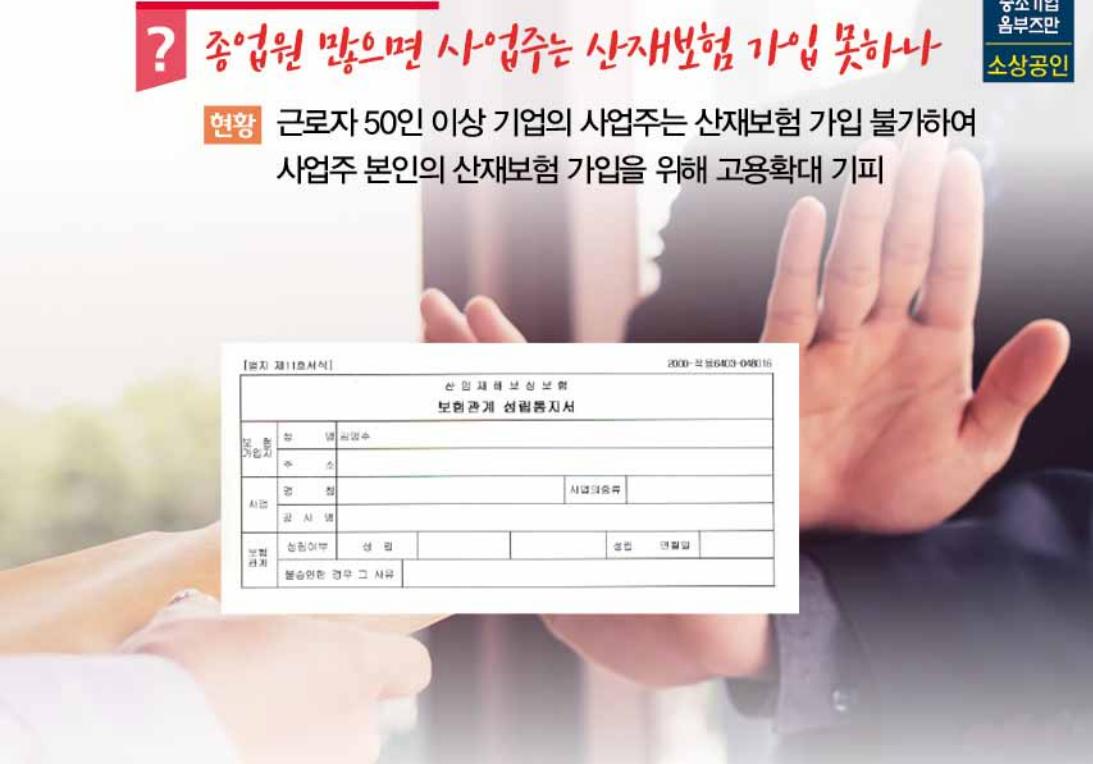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개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도입

- 공정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

? 종업원 많으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못하나

현황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사업주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확대 기피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범위 확대

개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
• 고용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전세버스사업자 주차장복귀하느라 길에서 시간만

현황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장에서는
전세버스의 밤샘주차 금지(밤12~새벽4시, 1시간이상)

! 전세버스 밤샘주차 일부허용

개선 관할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국토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도 힘들어

현황 상점폐업이나 전통시장 이외의 장소로 이전한 상점은 본인이
직접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도 개선

개선 가맹점 등록의 취소요건을 보완하여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직접 취소 허용

• 중기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9년)

? 취득세 중과세외 신고기간이 너무 짧아

현황 고급오락장 등*은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타용도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나, 30일은 짧고 일반취득세 신고기간 60일과 상이하여 납세자 혼란 초래

* 도박장, 유통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유사용도 건축물

** 취득세 중과세 : 일반세율(4/1,000) + 중과기준세율(400/100)



! 취득세 중과대상 타용도 사용 시 신고기간 확대

개선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하였으나 일반용도로 사용

예정인 경우 신고기간을 현행 30일→ 60일로 확대

• 행안부 : 지방세법 개정('19년)

? 경영어려워 휴업, 최대 1년만

현황 어린이집 운영 중 일정기간 중단시 1회, 최대 1년 이내만 가능



!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

개선 운영 중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 강사 생년월일이 중요하나

현황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학원강사의 연령 ·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의무



! 학원강사 연령 및 생년월일 게시의무 폐지

개선 강사 인적사항 게시대상에서 연령과 생년월일 제외

- 교육부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년)

? 비농업인이 농업해도 지원 못받아

현황 정부의 귀농인 지원은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정



! 귀농인 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개선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이 농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경우에도 귀농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농림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 귀농 농촌창업은 세제혜택 없어

현황 귀농주택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달리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귀농창업 활성화 저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세제지원

개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추진

- 행안부, 농림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후속조치('19년)

? 창업기업은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말인가?

현황 창업1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력고용기준 적용*이 제외되어 3~5년차 기업은 외국인 고용 불가

* 내국인 20% 범위내에서만 외국인 고용 가능



! 창업기업에 대한 E-7비자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개선 창업 5년차 기업까지 외국인력 고용기준인 '내국인 20% 범위내' 적용을 유예

- 법무부 : 법무부 지침 개정('19.3월)

? 작은 기업은 여성인턴 못쓰나?

현황 새일여성인턴사업에 연계 신청가능한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1,000인 규모이며, 5인미만 기업 연계는 제한*

* 다만 IT·세무 등 특정분야,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한해 일부 연계 가능
(담당 취업설계사 및 센터장 확인서 필요)



! 새일여성인턴사업 연계대상 기업 확대

개선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1인~5인 미만 기업도 참여 허용

• 여가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세부운영방안 개정('18.12월)

? 응급환자 없는데 구급차 보유해라?

현황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무조건 갖추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부담



!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구 합리화

개선 구급자동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자동차 비치 기준 개선

• 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 판매사업자는 3톤 미만에만 영업해라?

현황 LPG판매사업자는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공급이 가능하나, 3톤 초과 10톤 이하 저저장탱크 공급 불가

* 3톤 이상 저저장탱크는 LPG충전사업자가 공급



!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개선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3톤 미만 → 10톤 이하로 확대

- 산업부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9년)

? 필요없는 유량계도 2개씩 구비해라

현황 일반주류 제조자와 달리,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조장별로 유량계를 2개 이상 구비해야 해 해외업계 불만 및 부담 가중



! 소규모 주류제조자 유량계 구비의무 삭제

개선 소규모주류의 외부유통 허용을 감안,
소규모 주류제조자 유량계 구비의무 폐지

- 국세청 : 주세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전통주 묵음 홍보 및 판매하고 싶은데

현황 전통주 제조자는 온라인에서 자사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으나,
타사 전통주는 판매 불가

! 타사 전통주를 자사 전통주와 온라인 병행판매 허용

타사 전통주를 자사 전통주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세청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19.상)

? 수입맥주보다 높은 국산주세

현황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에, 수입맥주는 수입통관가격에
주세율(72%)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부담 차별 발생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주세 부과기준 차별 시정

개선 공정한 시장경쟁 구조확립을 위해 주세 과세체계 개편

- 국세청 : 주세법 개정('19년)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력 인센티브는 어디에

현황 병역지정업체 지정 시 '고용창출 중소기업' 항목을 평가하여,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우대하고 있으나, 인력애로 해소에는 부족

* 만점(100점) : 고용창출(25점), 수출(20점), 경영·기술혁신(20점), 성과공유(10점), 균형성장(17점), 정부표창 등 기타(8점)



! 고용창출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우대

개선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고용창출 중소기업 인원배정 우대
(가점 부여 및 추가배정)

- 병무청 : 전문연구용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훈령) 등 개정('19년)

? 비닐하우스 양식 우정이 있는 안돼

현황 녹지·관리·농림지역 안에서 육상어류양식을 제외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이나, 우렁이 등 일부 양식이 육상어류양식 여부 불명확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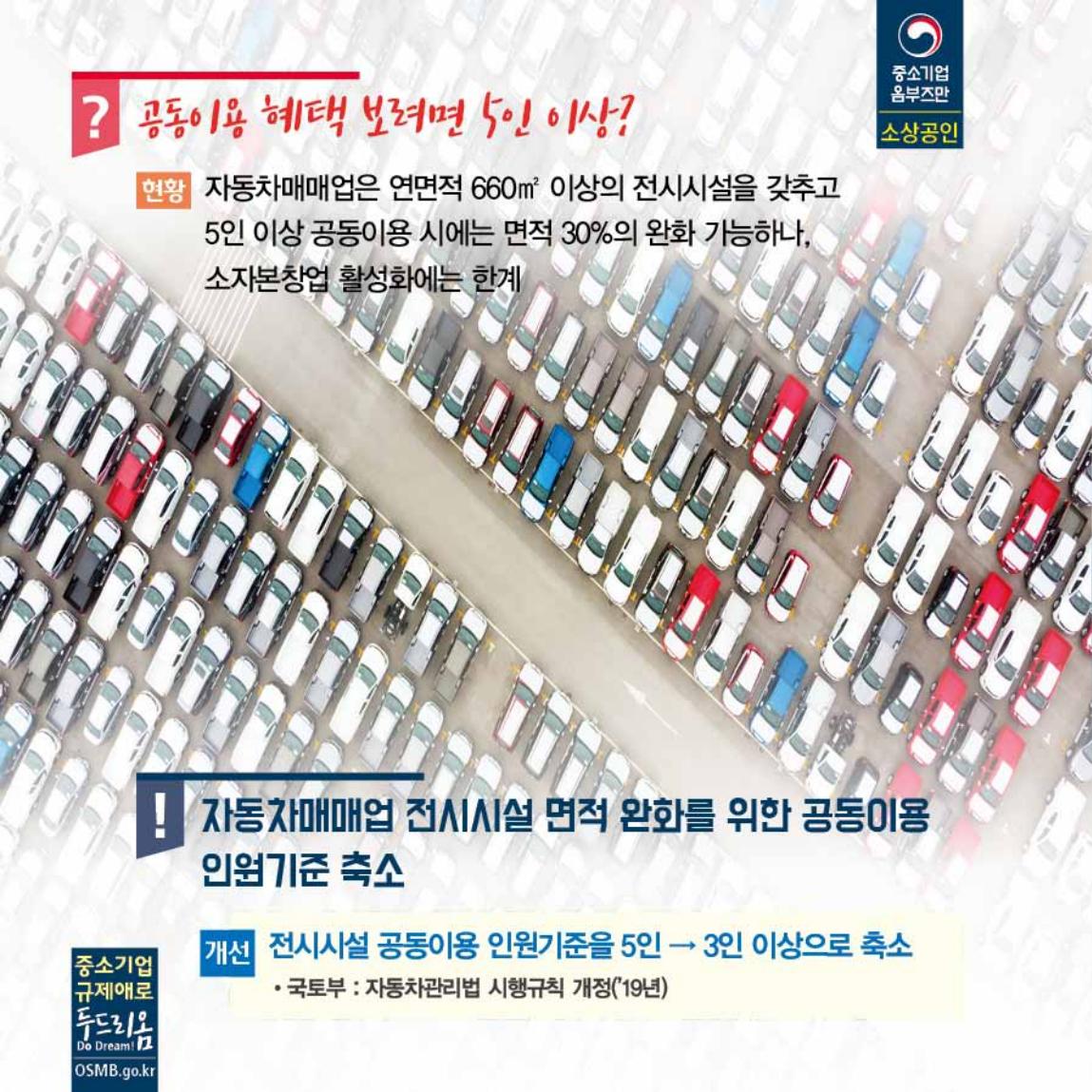
! 개발행위허가 대상 비닐하우스 양식장 범위 명확화

개선 비닐하우스 안에 콘크리트 포설 등 일정시설 설치없이 우렁이 등을 양식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국토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12월)

? 공동이용 혜택 보려면 5인 이상?

현황 자동차매매업은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고 5인 이상 공동이용 시에는 면적 30%의 완화 가능하나, 소지본창업 활성화에는 한계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완화를 위한 공동이용 인원기준 축소

개선 전시시설 공동이용 인원기준을 5인 → 3인 이상으로 축소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년)

? 위생교육 1번, 창업자는 잘 몰라

현황 업종이 세분화된 미용업의 경우 2개 이상 영업시 주업종 위생교육(1개)만 이수하면 되나, 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예비 창업자 혼선 초래



! 다수 미용업종 시 주업종 위생교육 명문화

개선 2개 이상 영업의 경우 주업종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

-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년)

? 현실성, 필요성이 떨어지는 노래방 교육

현황 노래연습장업자는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지자체 주관)을 의무적으로 이수(3시간)

* 정부는 노래연습장 신규교육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의무교육을 임의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발표('10년)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의무교육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

개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허용

- 문체부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18.12월)

? 외국인어업, 허가는 되고 신고는 안되고

현황 외국인은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대상에 포함되나, 맨손어업 등 신고 어업 대상에는 제외



! 외국인 맨손어업 신고 허용

개선 취업활동 제한이 없고, 주민투표권 보유 등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 다름없는 외국인에 대해 신고어업 허용

-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 해수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수부령) 개정('18년)

? 식품영업자 불편을 야기하는 위임장 서식

현황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양도인 · 양수인이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나, 표준서식이 없어 위임장 작성에 어려움 호소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위임장 서식 마련

개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위임장 표준서식 마련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12월)

? 의료기관은 되고, 약국은 안되고

현황 약국 개설자간 양도 · 양수에 따른 개설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후 양수자가 신규로 약국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 부담 발생

- * 병원 · 의원은 변경신고 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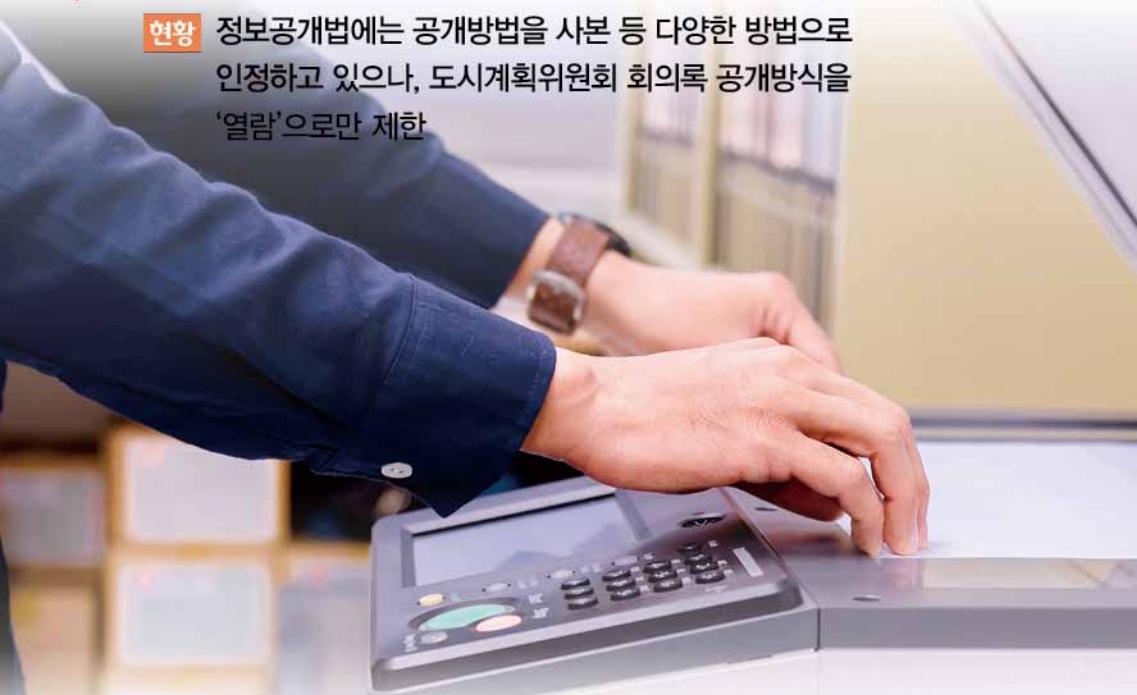
! 약국 양도 · 양수에 의한 개설자 지위승계 규정 신설

개선 약국 개설자 변경 시 양도 · 양수로써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

- 복지부 : 약사법 개정('18년)

? 열람은 되고 복사는 안되고

현황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방법을 사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식을 '열람'으로만 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개선 공개신청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제공 허용

• 국토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3월)

? 변경신고 기한 경과했다고 허가취소

현황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권 등 변경사유 발생시 토지소유권 등 관련서류 준비에 신고기간 경과로 허가 취소



!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기간 확대 및 미신고 제재 완화

개선 변경 신고기간을 30일 → 6개월 범위 내로 변경,
취소 대신 과태료 부과 후 기간연장으로 개선

• 산림청 : 산지관리법 개정('19년)

? 수수료 감면기간이 너무 짧아

현황 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이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으로 확인 신청시에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음



!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

개선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 및 수수료 감면 기간을 기존 6개월 → 1년으로 연장
• 중기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중기부고시) 개정('18.12월)

? 바로 되는 일이 7일이나 걸려

현황 약취배출시설은 대기 · 폐수배출시설과 통상 중복되나,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는 배출시설 변경처리와 달리 약취배출시설 변경처리기간은 7일이나 소요되어 기업혼란 야기



! 약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건의

개선 약취시설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시 처리 기간을 즉시로 단축
• 환경부 :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18년)

? 일반산단은 3년, 국가산단은 5년

현황 미개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해제 가능 최소기간이 5년 (지구지정 후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으로 과도하여 입주기업 부담 초래

* (국가산단) 5년, (일반산단 · 도시첨단산단) 3년, (농공단지) 2년



! 국가산업단지 지정 해제기간 단축

개선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

- 국토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2월)

? 국산화 개발해도 승인까지 한참 기다려

현황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군수사령부에 수시로 개발승인을 요청하나, 승인결정이 연2회(1월, 7월)로 한정되어 국산화 개발 지연 불가피



!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기간 단축

개선 국산화 개발 승인기관을 국방부에서 각 군으로, 연 2회에서 수시 승인으로 변경

- 국방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19년)

? 작은 기업도 큰 기업도 과징금은 동일하게

현황 배출시설 조업정지 관련 과징금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로 과도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상당



! 배출시설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적 개선

개선 제조업 배출시설별 매출액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8년)

? 응급상황 정비해도 행정처분 예외는 없어

현황 자동차 정비업자의 사업장외 점검 · 정비가 일부 허용되었으나, 사업장외에서 점검 · 정비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제외 규정 미비로 사업자 혼란 발생



! 자동차 정비업자의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개선 자동차 정비업자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장외 점검 · 정비시 행정제재 규정 마련

-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18년)

? 상속승계 신고기한이 너무 짧아

현황 어업허가 상속시 지위승계 신고기간(30일 이내)이 과도하게 짧아 어업허가 취소 등 불편 초래



! 어업허가 상속시 지위승계 신고기간 합리화

개선 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고기간 재설정

- 해수부 : 수산업법 개정('19.12월)

? 돈부터 먼저 내고 감면은 나중에?

현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금은 부담금 신고 · 납부 후 다음 연도에 감면 신청 및 반환토록 하여 기업불편 초래



! 일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금 반환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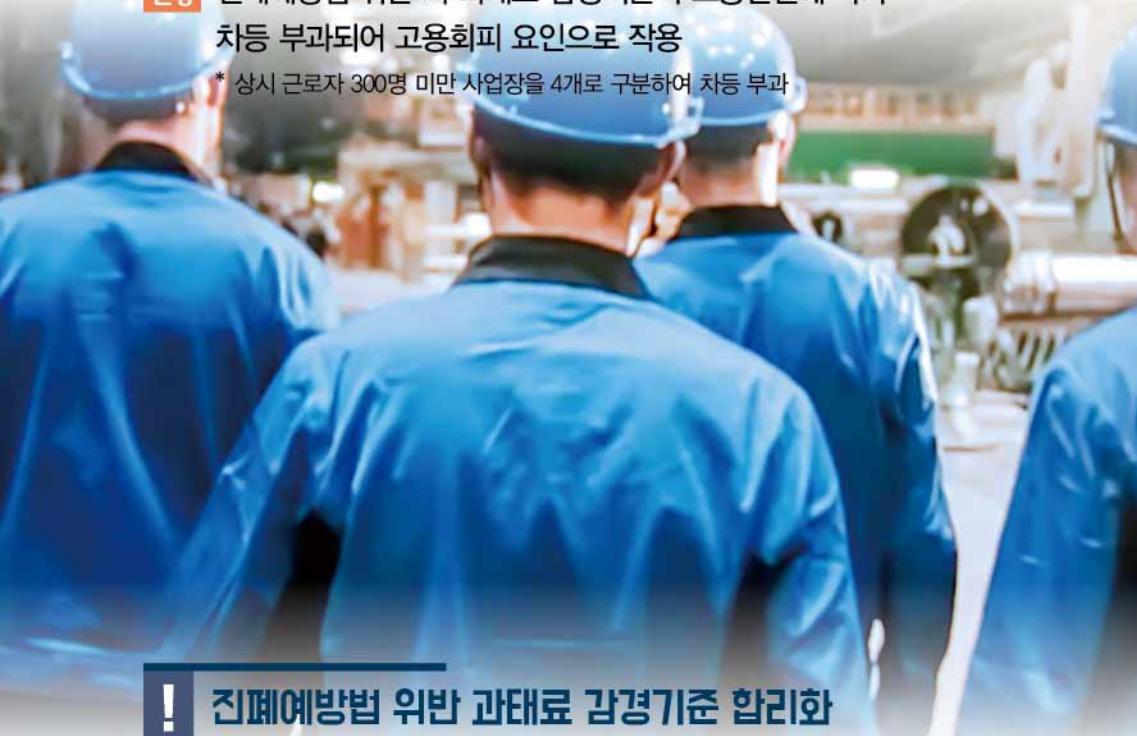
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시점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지정폐기물 및 도서지역 폐기물'의 처분에 한해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와 감면신청 동시 진행 허용 명문화

- 환경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18.12월)

? 매출 작은데, 인원 많다고 과태료도 많이?

현황 진폐예방법 위반 시 과태료 감경기준이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고용회피 요인으로 작용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4개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



! 진폐예방법 위반 과태료 감경기준 합리화

개선 과태료 감경기준을 고용인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고용부 : 진폐예방법 시행령 개정('19년)

? 즉시처리되나 수수료는 내라

현황 건설기계사업자의 휴·폐업 신고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것은 전산 즉시 처리 및 관리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수수료 폐지 필요



! 건설기계사업 휴·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개선 민원서비스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건설기계 사업 휴·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 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 식품파로 건강기능식품 파로

현황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취급 시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 중소기업 불편·부담 초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간소화

개선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식약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 휴·폐업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

현황 옥외광고사업 휴·폐업 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시 폐업신고 어려움

!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

개선 옥외광고사업 휴·폐업 신고 시 등록증 분실사유 기재 시 등록증 첨부 불필요 명시

- 행안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19년)

? 공영주기장 지원근거가 없어

현황 지자체에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기장 설치사례가 없음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선 공영주기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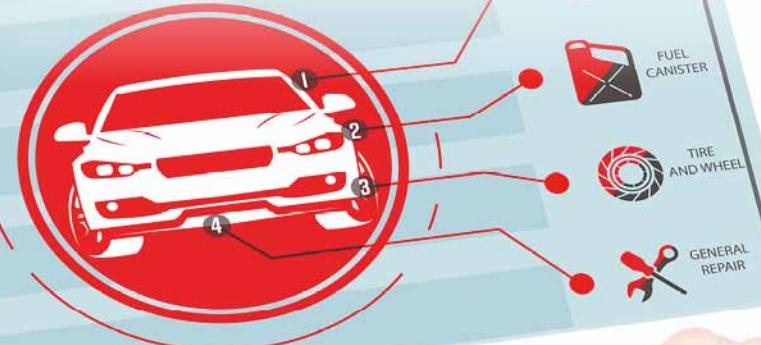
3.

숨어있는 규제애로 적극해소

01. 시험·검사기관 규제애로 선진화
02. 현실고리 규제애로 적극해소
03. 지원사업 및 지자체 규제기준 합리화
04. 불편시스템 신속개선

? 시험·검사 처리기한 없어

현황 일부 인증관련 시험·검사는 시험·검사기간이 내부규정으로 미공개 대상이거나 기간 규정이 없어 처리지연에도 속수무책



! 시험·검사기간 명확화

개선 법령 또는 내부규정 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 명확화

- 국토부 등 6개 부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또는 시험·검사 기관 내부규정 개정('18년)

? 이유도 모르는데 불합격

현황 시험·검사기관에서 명확한 불합격 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검사결과만을 통보하여 제품 보완 및 재시험 반복 등으로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 가중



! 시험·검사 명확한 불합격사유 제공

개선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 101개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개정('18년)

? 시험·검사기관 깜깜이 수수료

현황 시험·검사기관에서 수수료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어,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상 항목별
수수료·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시험·검사기관 시험수수료 정보 공개

개선 사전에 적정 수수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수수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

- 101개 시험·검사기관 : 소관부처 또는 시험·검사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험 수수료 정보 공개('18년)

? 내 단계는 지금 어디에

현황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까지
세부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규정 등을 비공개하여 기업의
권익 보호 저해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상 항목별
수수료·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시험·검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공개

개선 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 홈페이지 공개 및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

- 113개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홈페이지에 업무 운영절차(SOP)
공개 및 내부규정 개정('18년)

?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야 하지 않나

현황 시험·검사기관에서 처리기이 넘어도 자연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기업의 생산·입찰참여·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 초래



! 시험·검사기관 자연시 자연사유 고지

개선 시험·검사 자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 122개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개정('18년)

? 아직도 문턱 높은 시험·검사기관

현황 시험·검사기관에서 담당자의 불친절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많아 기관 신뢰성 저하



! 시험·검사기관 서비스 강화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고객만족(CS) 교육 강화

- 136개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개정('18년)

? 농지 내 식물공장은 가능하면 안되나

현황 고품질의 엽채류 등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불가(우량농지 훼손 우려 등)



!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공장 (수직형 농장) 입지제한 완화

개선 식물공장 개념 정립 · 실증 사업 후 입지 검토

- 농림부 : 개념정립 · 실증사업 추진 및 입지여건 검토('19.6월)

? 따로따로 기자재, 호환 어려워

현황 식물공장은 활성화 초기단계로 기업별 LED 등 기자재를 맞춤형으로 제작 · 설치하여 호환이 어려워 유지보수 애로



! 식물공장 기자재 표준화

개선 LED 보광등, 다단재배장치, 식물이송 및 작업 편의장치 등
식물공장 특성에 맞춰 기자재별 표준화 추진

- 농림부 : 식물공장 기자재 표준화 대상 발굴('18.12월), 표준(안) 마련('19.12월)

? 청소년은 볼룸댄스 배우면 안되나?

현황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 · 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 등록 불허



! 댄스스포츠의 학원등록 허용

개선 댄스스포츠도 학원법에 따른 시설 ·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

- 교육부 : 시 · 도교육청 통보('18.7월)

? 해양플랜트도 고속력 외국인력 필요해

현황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대상에 해양플랜트 분야 설비 및 제작 부문 등의 직업은 제외되어 있어 고급 외국인 인력 수급에 애로



!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 비자 허용분야 확대

개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 범위 내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 허용

- 법무부 : 특정활동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18.12월)

? 의료폐기물은 재활용 안되나

현황 의료폐기물에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증가되어, 일부 위해성 낮은 생물·화학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대비해 처리시설 부족



! 의료폐기물 등 병의원 폐기물 관리체계 합리화

개선 감염성을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대형 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교육부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마련·시행('18.7월)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 교육환경법 개정('19.12월)

? 신산업분류! 기업은 알기 어려워

현황 신산업 창업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사업자등록 등 추진에 애로



! 신산업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안내지원

개선 신산업 사업체의 수행활동 검토 후 사례집 게재 및 산업분류 색인어 지속적 추가

- 통계청 : 사업활동 구체적 적시 문의 시 적극 검토 후 사례집 게재·안내 및 산업분류 색인어 지속 추가('18년)

? 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영업 안되나

현황 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자가품질검사 등 추가비용 부담



!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

개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객석 없는 테이크 아웃·배달 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허용

- 식약처 : 지자체 공문 송달('18.9월)

? 전복은 좀 크다고 재해보험도 안돼…

현황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중이나, 보험대상을 '각장 3cm 또는 무게 5g'으로 제한하여 전복종자는 재해보험 가입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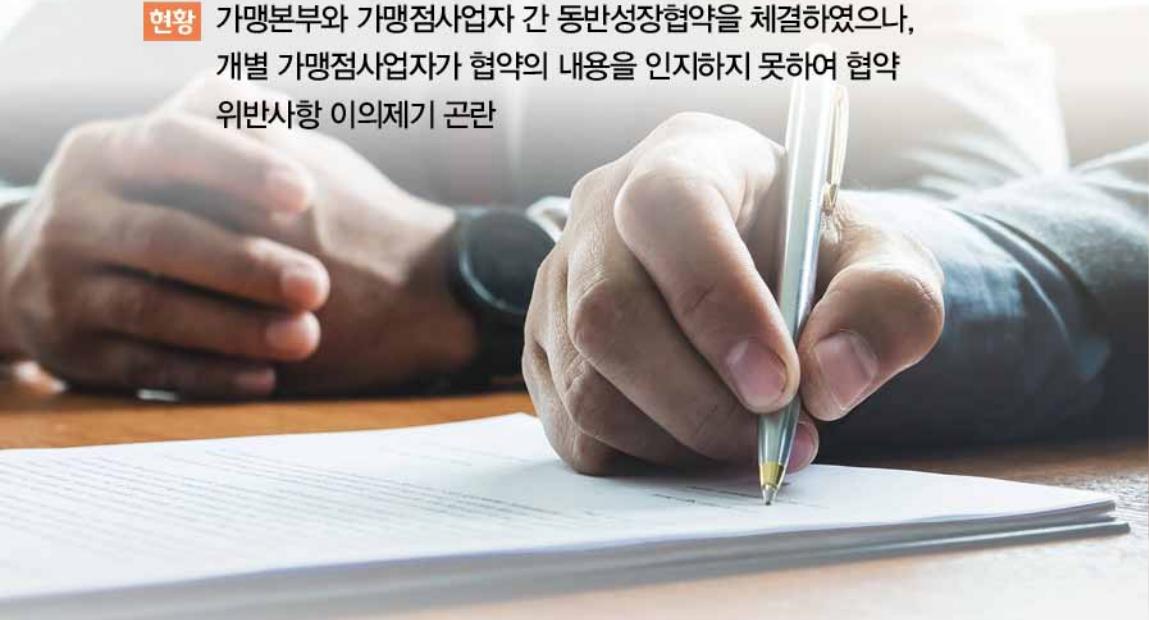
! 전복양식수산물 종묘 재해보험 상품 출시

개선 어업인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전복종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 해수부 : 전복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18.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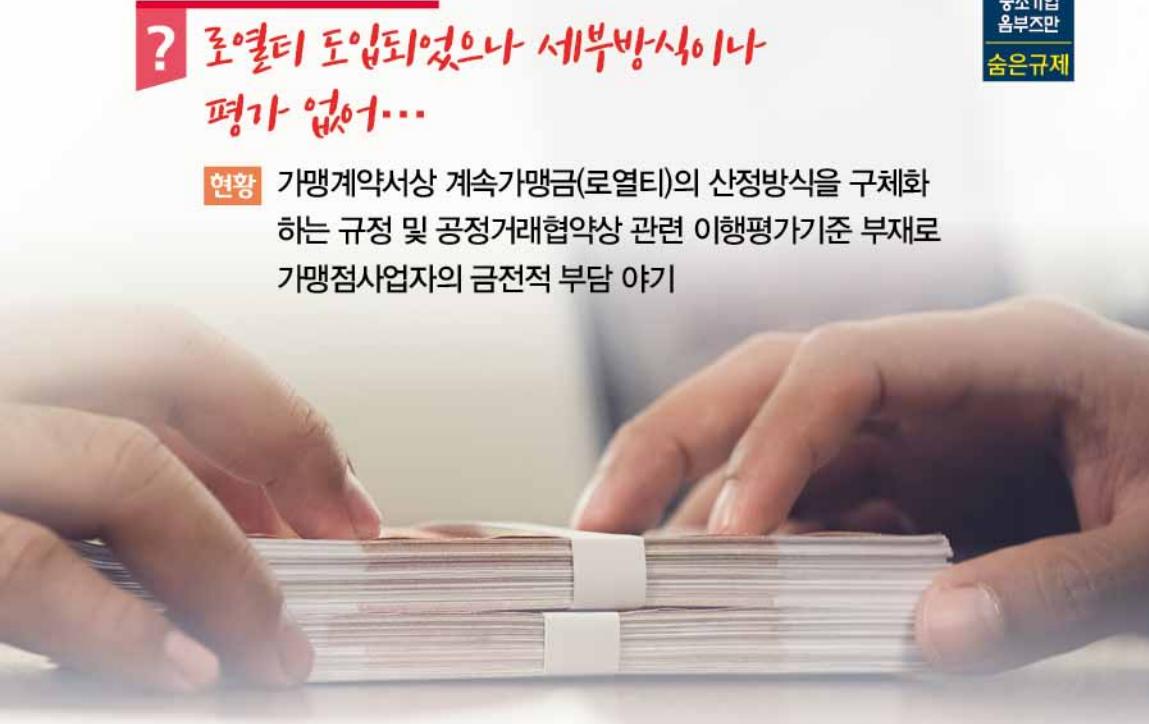
? 개별사업자 협약내용 몰라…

현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협약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협약 위반사항 이의제기 곤란



? 로열티 도입되었으나 세부방식이나 평가 없어…

현황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로열티)의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규정 및 공정거래협약상 관련 이행평가기준 부재로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부담 야기



! 가맹사업 상생협약서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배포

개선 가맹본부가 동반성장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협약서 사본 제공을 유인

- 공정위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예규) 개정('18.12월)

!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로열티) 산정방식 구체화

개선 표준가맹계약서에 계속가맹금 산정방식 규정 신설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관련 평가기준 신설

- 공정위 : 표준가맹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예규) 개정('18.12월)

? 4층 이상에는 간판 설치하지 말라

현황 다수 지자체에서 벽면이용 간판은 3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현재의 간판설치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규제



!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

개선 벽면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 행안부 : 표준조례안 개정('18.12월)

? 내 책임도 아닌데 사업비 환수?

현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처 사유로 수요처
현물집행불가시 과제 주관기관(중소기업)이 현금을
부담하는 불합리 사례 발생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합리화

개선 수요처의 현물 미부담분에 대한 주관기관 사업비 환수 면제
조항 신설

- 단, 현물 미부담 수요처에 대한 제재조치(동 사업 참여제한 3년)
- 중기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리자침 개정('18년)

? 뿌리산업 지원금액 및 비중이 너무 적어

현황 뿌리산업인 도금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비용부담이 상당하여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산업단지 내 도급업체 국비지원 사업 확대

개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금액과 공동활용시설 지원비율 확대

- ('18년) 지원금액 39억원, 지원비율 30% → ('19년) 지원금액 63억원, 지원비율 50%
- 산업부 :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고('19.3월)

? 폐업이력 있다고 정책자금 신청불가

현황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 폐업 이력자는 재창업자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창업자금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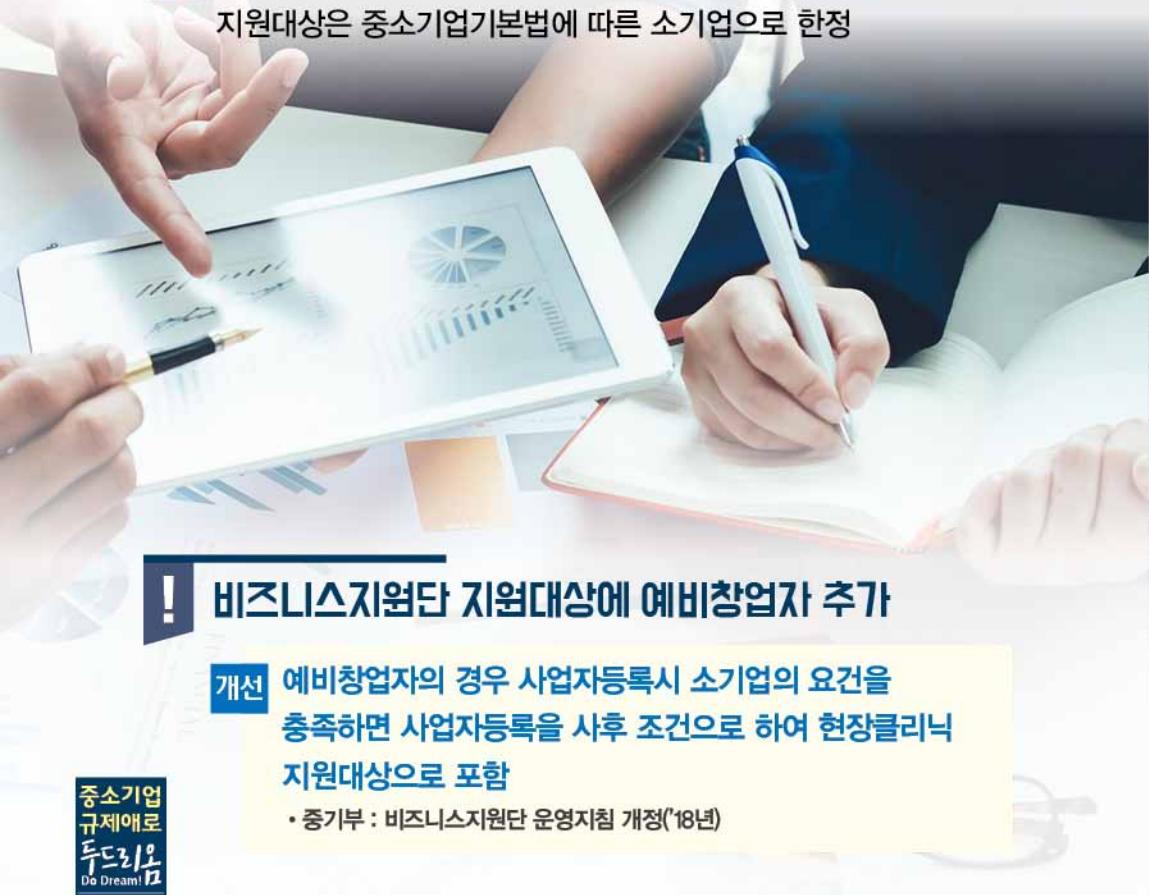
! 소매업 폐업 이력자도 재창업자금 신청 허용

개선 소매업 폐업 이력자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재창업자금 신청이 허용

- 중기부 : 2018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수정('18년)

?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도 못 받아

현황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지원대상과 달리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한정



! 비즈니스지원단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 추가

개선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사후 조건으로 하여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으로 포함

- 중기부 :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개정('18년)

? 100마력 이하 선외기만 지원가능

현황 가솔린기관은 사업지원대상 중 가장 후순위이며 총톤수 2톤 미만, 100마력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 선정에 곤란



! 소형어선 어업인에 대한 유류절감장비 지원 확대

개선 선외기 등 가솔린기관 사업지원대상 기준을 150마력 이하로 확대
• 해수부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18.1월)

? 특수선박 건조해야만 수산과학조사선 만들 수 있나?

현황 특수선박 건조 실적이 있어야 수산과학조사선(선상연구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기타 선박 건조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 불가



! 수산과학조사선(시험조사선) 입찰참가 자격요건 완화

개선 중소형 조선소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기준 완화

- 수산과학원(해수부) : 추후 건조 선박 입찰공고시 반영('19년)

? 항만시설 매년 새로 개선...

현황 경북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매년 큰 변동 없는 영구시설과 위판장 등의 사용연장 신청은 민원인 불편 및 행정력 낭비



!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개선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만시설 사용기간을 1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

- 경북도 : 경상북도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규정(경북고시) 개정('19.상)

? 인천 드론 시험비행 공간 없어

현황 인천로봇랜드가 준공된 후 드론 관련 기업이 입주하였으나,
드론 시험비행 공간이 거의 전무



! 인천 드론 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

개선 인천시 공공유지부지 내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또는 교육장 마련

- 인천시 :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18.6월)

? 신청취소해도 돈은 내라?

현황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경북·경기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검사 개시 이전에 의뢰를 취소해도 검사수수료를 반환해
주지 않음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반환

개선 시험·검사 개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반환

- 전남도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18.3월)

? 시장, 광장,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안돼

현황 부산시 내 푸드트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 부지, 도시공원,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나, 전통시장, 광장, 공영주차장은 곤란



! 부산시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 확대

개선 부산시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에 전통시장, 광장, 공영 주차장도 포함

- 부산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18년)

?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는데 증축 가로막아

현황 계양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 해제('06년)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12. 11월)으로 제조업소 증축 불가



! 인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개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 지구에 대해 제조업소 신·증축 허용

- 계양구 : 지구단위계획 변경('18.12월)

? 급수공사 수수료는 우리 지역만 10만원?

현황 금산군 내 급수공사 대행수수료는 신규 건당 10만원으로
타 지자체(무료~4만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



! 금산군 급수공사 대행수수료 기준 완화

개선 전국 최고 수준인 금산군 급수공사 대행수수료 신규 건당
10만원 수수료 징수 폐지
• 금산군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18년)

? 장외영향평가서 너무 어려워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는 사고시 장외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나 내용이 어려워 작성에 부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개선 중소 · 영세기업 중심으로 안내서 · 예시집 추가 개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 기능 개선 등 지원 강화
• 환경부 :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책자 보완 및 프로그램 고도화('19.3월)

? 너무 부족한 자금지원 이차보전율

현황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을 연 2.5%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기업경영 애로해소에 한계

* 이차보전 :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



!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을 현행 2.5% → 3.0%로 상향 조정

- 함양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반영('19년)

? 연구개발사업 책임은 다른 이에게

현황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참여기업 · 위탁연구기관의 부도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과 같이 주관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수행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사업비 관리·정산 합리화

개선 사업비 지급 · 정산 등에 대해 각 수행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관리연구비 시스템 개편

- 증기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개정, 연구비 시스템 개선('19년)

? 실적이 없는데도 무신고 과태료?

현황 폐기물 배출 실적이 없어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무실적 신고의무 안내 없이 신고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폐기물 배출 무실적 신고필요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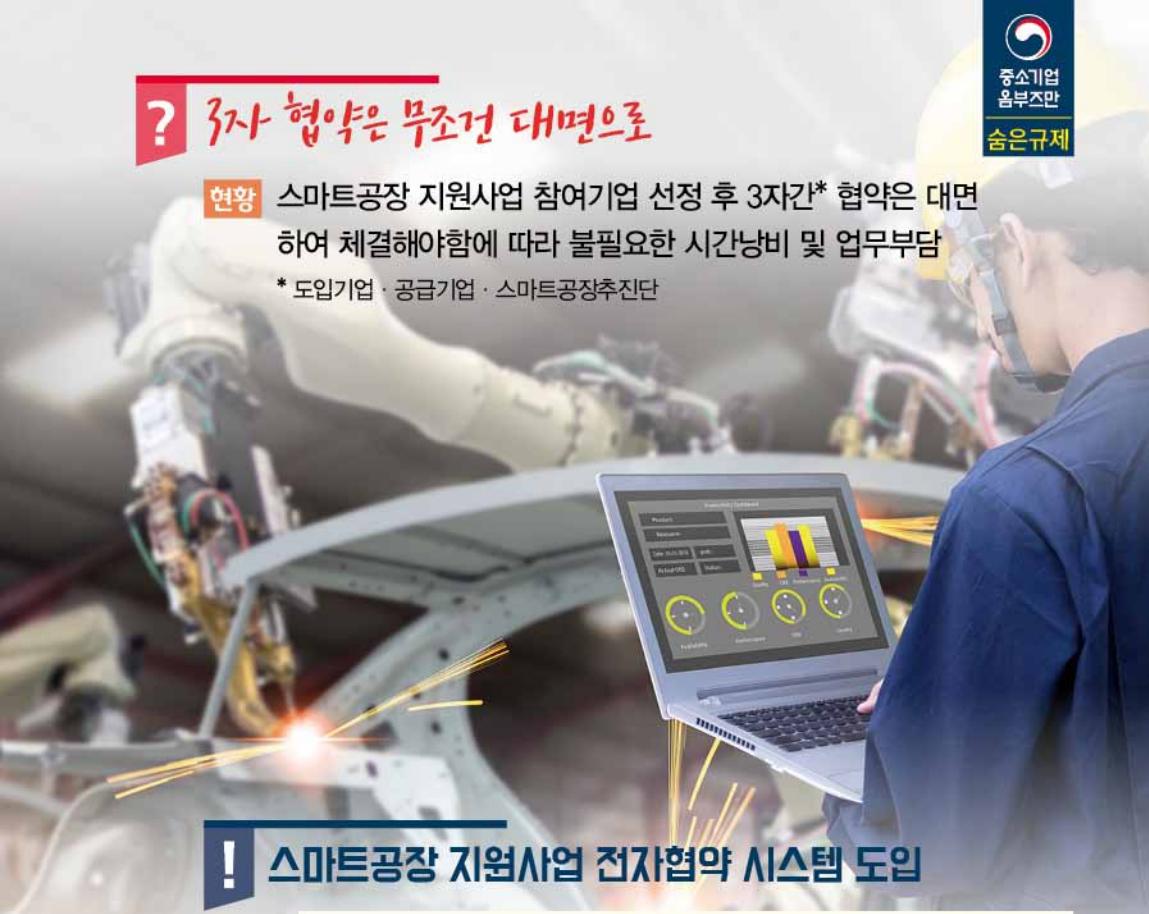
개선 폐기물 배출 무실적 시 실적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

- 환경부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개편('19.1월)

? 3자 협약은 무조건 대면으로

현황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3기간* 협약은 대면하여 체결해야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업무부담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추진단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자협약 시스템 도입

개선 참여기업 편의제고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자협약 시스템 도입

- 중기부 : 전자협약 시스템 도입('18년)

? 소독업무는 무조건 집합교육만

현황 소독업무 종사자는 감염병 관리정책 등 소독에 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 발생

* 최초교육 6개월 내 1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8시간

? 사회적기업 서류제출 창구가 너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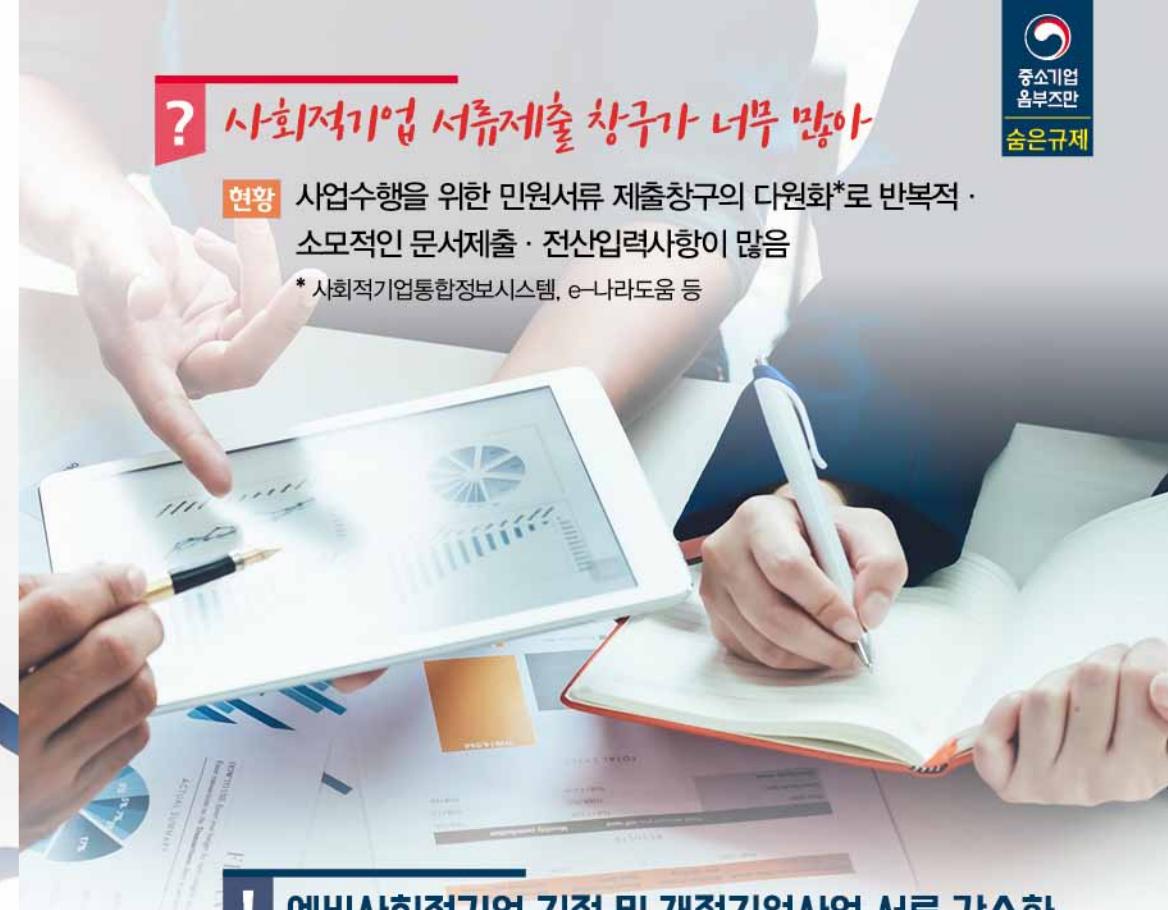
현황 사업수행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창구의 다원화*로 반복적·
소모적인 문서제출·전산입력사항이 많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등

! 소독업무 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시

개선 보수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복지부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19.12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개선 지원금 신청서 제출창구 일원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간소화

- 고용부 : 통합정보시스템 간소화 방안 마련('19년)

? 폐업하려면 관청 방문해라

현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과 달리 폐업신고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관청에 방문을 해야 불편 발생



? 석유판매사업 찾은 보고, 전산은 안돼

현황 석유수급 보고 주기 단축(월간→주간) 후 전산보고도 가능
하나,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 기능 미흡으로 석유 판매
업소 보고 불편·부담(인건비 및 시간 소요) 여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온라인 신청

개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도 폐업신고 온라인(정부24) 처리가 가능
하도록 개선

- 행안부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사업에 반영('19.3월)

! 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사업자 수급보고 간소화

개선 전산보고 확대를 위해 중계 소프트웨어의 자동보고 기능 등
사업자 요구사항 반영

- 산업부 : 중계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19년)

? 학원강사 증명서류는 오프라인으로만

현황 학원은 온라인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강사등록을 신청 하나, 자격증 등 증명서류는 오프라인 제출만 가능

? 유원시설 안전교육은 온라인 안돼

현황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집합교육으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워 애로 발생



! 온라인 학원민원서비스 기능 보완

개선 온라인 강사등록시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원본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교육부 :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기능 개선('19년)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

개선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온라인 안전교육 시행

- 문체부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온라인 교육 과정 개설('18.7월)

? 공제부금 자동이체만이 방법인가?

현황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근로자가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해 외국계 은행 등 일부 자동이체 불가 은행계좌 사용 시 공제가입 곤란



! 내일채움공제 부금 납입방식 확대

개선 자동이체방식 외에 가상계좌 방식 등 다양한 공제부금 납입 방식 확대

- 증기부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련규정 개정('18.12월) 가상계좌 방식 도입('19년)

? 위생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현황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급이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여 신청인 불편



!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개선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 해수부 : 시스템 구축('19.9월)



대한민국정부
중소기업옴부즈만

?!



씨는 베일에 싸인
기업사상꾼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로 인해
곤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곤란하게 한
규제를 **현상수배합니다.**



정부가 설립한 특수기관
OSM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늘 정부와 중소기업의
올바른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늘 정부와 중소기업의
올바른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전화
전국 243곳
지방규제 신고
고객보호 센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데
실제로 처리가 되는 하나요?



19,813건

규제애로 처리건수

3,465건

제도개선

5,212명

기업소통

7.1조원

규제비용 절감

불편한 규제애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해 주세요!

www.osmb.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불량규제, 어려운 애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신고, 전화, 팩스,

E-mail(E-mail: bizhomin@korea.kr) 또는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 주세요

분야별 전문위원이 신청한 애로사항의 문제점을 검토,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야별 전문위원

대표번호 02-2100-4900

입지	02-730-2407 · 2497	환경	02-730-2408 · 2475
금융	02-730-2478	기술	02-730-2461
보건	02-730-2498	안전	02-730-2463
상생	02-730-2479	세제	02-730-2477
수출	02-730-2492	인력	02-730-2472
창업	02-730-2474	판로	02-730-2496



업무처리절차



규제발굴 협업플랫폼 운영
불편과제 집중발굴



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와
협업체계 구축 · 공동협의



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간의 활동

규제혁신 성과

- 01 첨첩산증 인증규제
- 02 부담백배 비용규제
- 03 정부조달 장벽규제
- 04 현실고리 창업규제
- 05 높은기준 환경규제
- 06 성장저해 발목규제
- 07 중소기업 불편규제
- 08 사각지대 지방규제
- 09 소상공인 부담규제
- 10 현장애로 가시규제

친기업 환경조성 성과

- 01 기업민원 보호정책
- 02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 03 기업활력지수
- 04 기업중심플랫폼
- 05 기업대변 옴부즈만

규제개선 성과

기술개발·제품화 이후,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인증규제 부담경감

인증
규제

기업 목소리

- 인증은 기업활동 및 제품혁신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로서, 대다수 기업에게 적용
- 높은 인증수수료, 유사인증 난립 및 심사항목 증복, 과도한 심사기간 등에 큰 불만



옴부즈만 응답

- 부처별 인증제도 중복성 및 불합리성 개선으로 4,300억 비용경감(국경위 협업, '12년)
- 인증규제 제로베이스 정비로 1.4조원 경제효과 창출(국조실 협업,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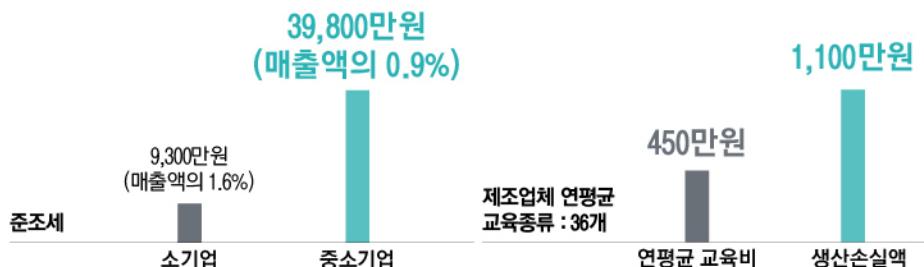
과도한 금전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비용
규제

102

기업
목소리

- 기업은 비자발적 금전부담(준조세)* 규제로 연간 약 32조 납부(GDP의 3%, 조세연구원, '09년)
- 수수료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부과요건·요율 등에 대한 관리 부재로 투명성이 저하

옴부즈만
응답

- 부담금, 보험금, 수수료, 접용료, 협회비 등 준조세 경비 절감(기재부 협업, '11~'12년)
- 현장인터뷰를 바탕으로 중복교육 해소, 교육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교육비용 경감
('12년, 946억원)

조달기업 진입기준 현실화로 창업·소기업 조달기회 확보

장벽
규제

103

기업
목소리

- 조달은 물품 신뢰성을 보장하고, 판매대금 회수가 안전하며 적정이윤 확보에 유리
- 정부조달 입찰참여시 과도한 실적기준 요구, 각종 추가 행정절차 등이 기업부담 초래



- 조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절차, 직접생산확인제 등 29건 개선(기재부 협업, '12년)
- 공공조달 참여확대를 위한 조달시장 진입규제 41건 개선('14년)
- 직접조달 사업공고 전수조사(5.6만건), 기업건의 전면 수렴을 통해 조달 규제·제도 139건 개선
(국조실 협업, '16년, 3.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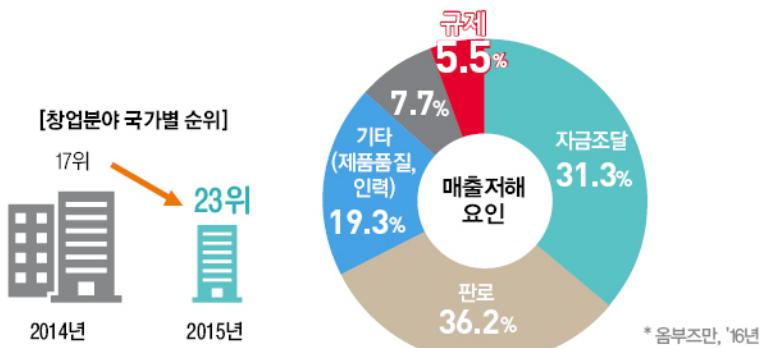
시장변화를 반영한 창업규제 개선으로 도전적 창업유도, 공정경쟁 활성화

창업
규제

2014

기업
목소리

- 과도한 등록요건 및 입지규제로 시장진입 및 경쟁저해
- 창업절차는 대폭 개선되었으나 일률적 입지규제, 업계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창업저해

옴부즈만
응답

- 지정요건 및 입지규제 등 시장진입 규제개선 (26건, '14년)
-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규제부담 및 비용을 진단하여 60건 규제개선(국조실 협업, '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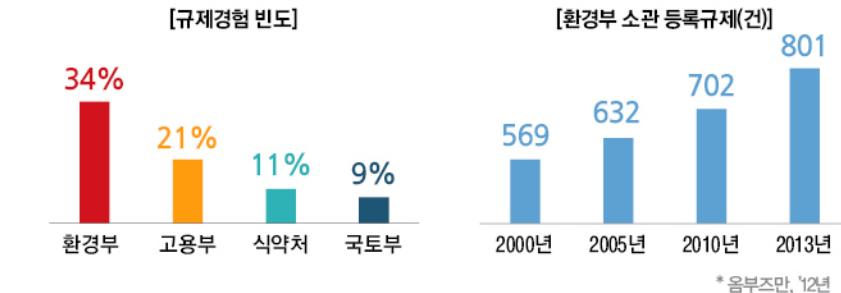
기술발전, 산업특성 및 위험요인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규제 현실화

환경
규제

2015

기업
목소리

- 환경규제는 기업순종 비용이 매우 높은 고질규제로 사업활동 여부에 직결
- 최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투자 저해

옴부즈만
응답

- 폐기물 처리 부담규제 개선, 1천억원 비용 경감 (기재부 협업, 22건, '12년)
- 기업 활동단계별 과도한 환경규제 합리화, 기업투자 촉진 (기재부 협업,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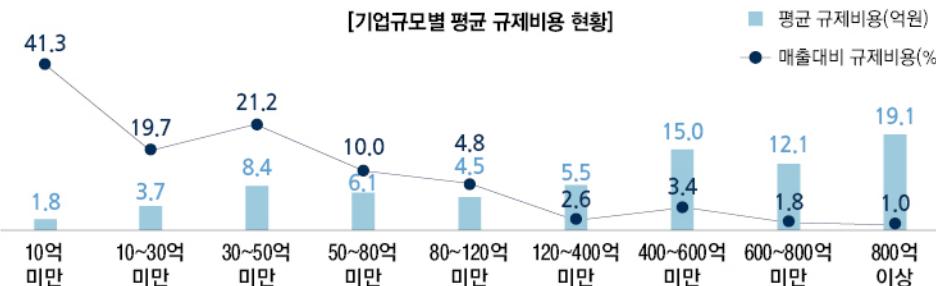
기술개발 촉진 및 신사업 허용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발목
규제

2016

기업
목소리

- 규제는 기업환경의 제약조건이자 기업성장의 지원동력
- 기업인력·규모별로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실정으로 기업은 맞춤형 규제완화를 요구



- IT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규제로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

옴부즈만
응답

- 신성장 규제를 합리화 (총리실 협업, 31건, '10~'11년)
- 6개 주요 협·단체와 공동으로 성장저해 규제를 발굴하여 60건 개선 (기재부 협업, '13년)
- 투자걸림돌 제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64건 개선 (기재부 협업, '14년)

현실고리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자율적 생산활동 보장

불편
규제

2017

기업
목소리

- 중소기업 현장에 부합하지 않은 각종 규제로 기업 불편 과다
- 또한 대내·외 경기악화와 영세한 기업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이행이 매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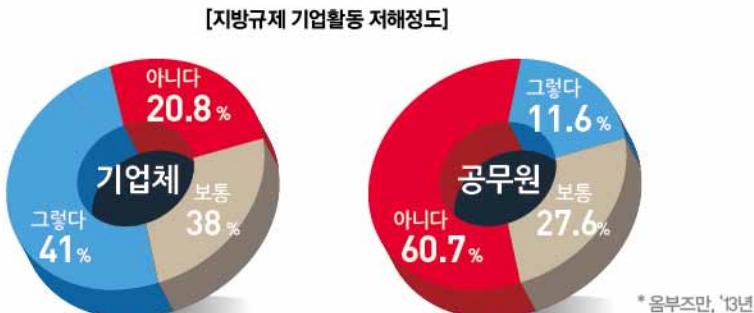


- 금융, 인력, 입지 등 기업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규제 합리화 및 차등화 (총리실 협업, 38건, '10~'12년)
- 생산활동 규제제약 완화 및 각종 기준규제 현실화 (34건, '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개선을 통한 친기업 투자환경 조성

지방
규제

- 기업 목소리**
- 그간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
 -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및 효과가 일선 현장 지방규제(자치법규)까지 전파되지 못함



- 처음으로 전 지방규제를 비교·분석 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관행 개선
- (안행부 협업, 1,274건, '13년)
- 규제지도,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지속 가능한 지방규제개선 경쟁시스템 구축계획 마련('13년)
- 창업·생산활동 및 지원사업 등 경영지원 관련 지방규제 70건 정비('14년)

음부조만
응답

2018

소상공인 영업환경 규제개선으로 자생력 제고, 민생경제 활성화

부담
규제

- 기업 목소리**
- 서민경제의 뿌리인 3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기부진 속에 어려움 가중
 - 동일한 규제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규제준수 부담은 상당하며 부담측면에서 형평성이 저하



- 28개 소상공인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로 집중발굴, 개선
(총리실·기재부 협업, '12년)
- 소기업·자영업 영업활동 제한 핵심규제 20건 개선 (기재부 협업, '14년,
규제개선 수혜대상 1백만명)
- 업종·업태별 릴레이 간담회를 바탕으로 바닥규제를 발굴, 개선('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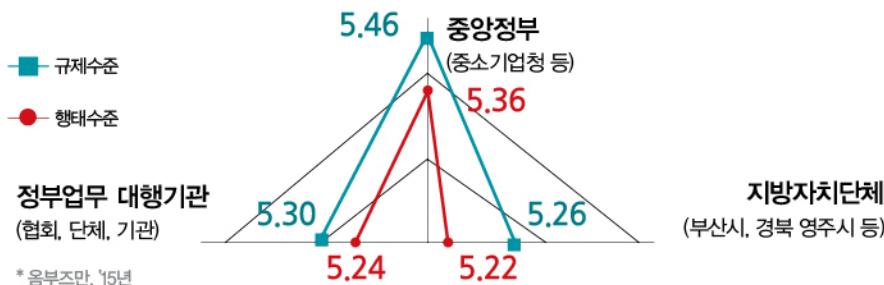
음부조만
응답

2019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개선을 통한 친기업 투자환경 조성

가시
규제

- 기업 목소리**
- 손톱 밑 가시 규제애로는 빙산의 일각 같아 수면 밑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기업의 창의·활력을 저해
 - 즉 숨은규제, 집행애로, 부당관행 등 가시 뿐기는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살리기의 한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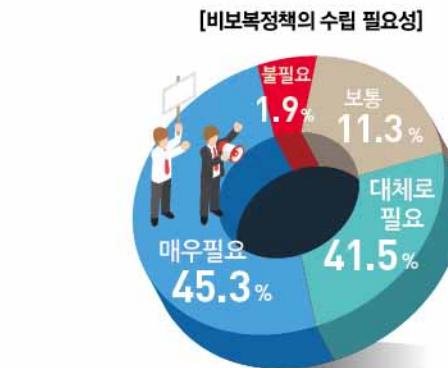


- 응답**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기업애로 240건 집중 발굴, 60건 개선(국조실 협업, '13년)
 - 서류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 및 경영불편 애로해소 52건 실시('15년)

기업 민원인 보호정책 활성화를 통해 기업 권익회복 · 규제신고 여건 개선

민원
보호

- 기업 목소리**
- 규제 민원기업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의도적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은 11.7%(읍면지자체, '10. 5월)



[민원제기 하지 않는 이유]

- 어차피 해결 되지 않는다 43.4%
- 번거롭다 38.4%
- 꺼림칙하다 29.6%
- 방법을 모른다 15.1%
- 필요성을 못 느낀다 6.9%

- 응답**
- 중소기업기본법, 식약청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민원인 보호정책을 제도화('11. 7월, '10. 7월)
 -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현장안 마련 및 권고를 통해 각 부처 14곳 제정, 전 지자체 243곳 제정

대·중소기업간 갑·을 구조 철폐를 위한 동반성장 정책건의 및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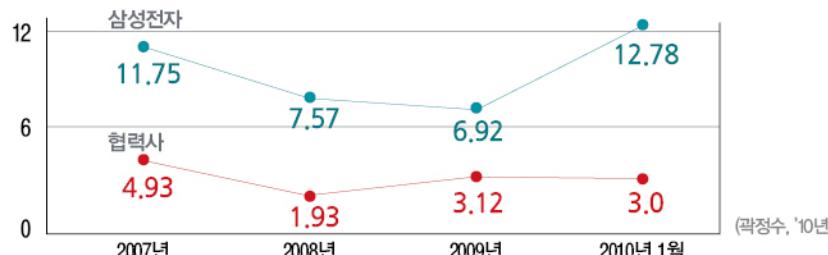
공정
거래

2012

기업
목소리

-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갑·을 관계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
- 대기업에 치우친 규제기준, 공정 거래제도 미흡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순이익률 비교]

옴부즈만
응답

-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구축방안 마련
 1.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2.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방지
 3. 자력재산권 보호
 4. 부당거래 방지
 5.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 관계부처 협의, 동반성장 정책 수립

기업 성장환경 및 정부기관 개선노력 등을 지수화하여 자발적 기업환경 개선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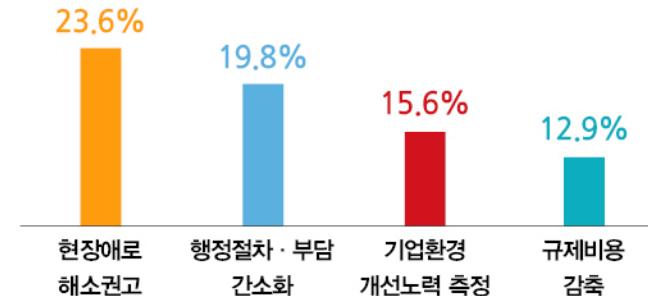
기업
활력지수

2013

기업
목소리

-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기업, 공무원의 인식차이로 규제개혁 추진력 확보 미흡
- 지속 가능한 규제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경쟁 시스템 마련 필요

[기업희망 옴부즈만 중점 추진과제('16년)]

옴부즈만
응답

- 지자체 기업활력지수(지방규제지수) 추진 ('13년~, 인행부 협업)
- 정부부처 기업활력지수 측정 및 공표 추진 ('15년~, 중소기업 협·단체 협업)

기업 눈높이에서 블랙박스를 열어 기업중심 규제개선 체계 마련

기업중심
플랫폼

규제지도 & 나침반

지자체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
“공장증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 목소리는 누가 듣지?”
“어디가 좋을까?”



기업함께 원탁협의

개선과정은 기업에게 블랙박스
“내 목소리는 누가 듣지?”



원클릭 바로알림

지자체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
“규제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보지?”



규제 투명성!

규제 민주성!

규제 책임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기업대변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건의

기업
대변

기업대변 문제제기

중소기업은 역량 부족으로
대외 기업소리 발언 미흡



친기업환경 제도건의

전 부처 규제개혁 기본원칙 등에
중소기업 관점 적극 반영 필요



부조리 관행 척결

규제권한 남용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기업불만 상당

* 규제개혁 마인드 및 태도개선 필요 52%(전경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 관행 문제제기

- 진단: 비정상 지방규제, 면피행정 애로, 편의행정 애로
- 제언: 인센티브 확대, 감사적극 활용, 기업민원 보호, 규제피해 구제

부처간 규제개혁 활동 협업

- 국토부 민관정책협의회, 산업부 규제청문회, 환경부 협동법 협의체 참여

행정처분의 자동화기 · 승인제 도입

- 행정처분 자연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건의
- 인허가 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체화로 반영(19개부처, 26개 사무)

소기업 규제유예제 도입

- 기업규모별 규제차등화가 부족하여 소기업 규제부담 현실화 요구 상당
- 1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기업활동 신설규제 3년간 면제

투자저해 부조리 행태 99건 적발
및 조치('15년, 감사원 협업)

- 현실고리 법령 제정·운영
- 법령에 근거없는 숨은 규제
- 규제개선 후속조치 미흡
- 소극적 업무처리 등 규제 부당적용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현장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두드림, 601일

발 행 월 2019년 1월
발 행 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발 행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전화·팩스 02-2100-4900 02-2100-4941
기획·편집 이대건·박재현·유주현
디자인 트라이앵글 이진욱 triangle2010@naver.com

* 본 책자 사례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소관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규제애로를 개선하기로 확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는 추가 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잘못된 규제는 바꾸고

불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도 힘껏 두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
중소기업옴부즈만

02-2100-4900



중소기업이 원한다.
혁신성장을!

음부즈만이 돋는다.
규제혁신을!



중소기업
규제에로
두드러기
Do Dream!

음 부 즈 만

기업불편 규제신고는 www.osmb.go.kr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bizinfo.go.kr

중소기업 종합상담은 ☎ 국번없음 1357